2016년 대전세종연구원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2016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2016년 대전세종연구원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2016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CONTENTS

Ⅰ. 기관소개

007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008 연혁
009 주요현황
010 비전 및 미션

Ⅱ. 연구원행사

013 연구원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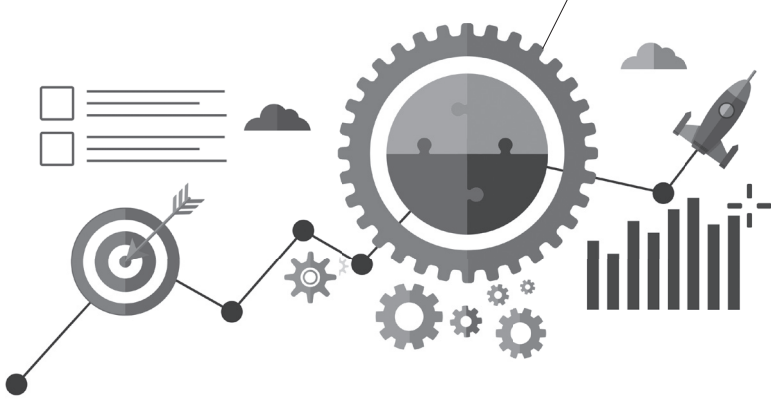
Ⅲ. 연구과제요약

031 자치행정
047 산업경제
073 복지여성
097 문화관광
109 교통계획
125 도시계획
157 생태환경

Ⅳ. 발간자료

179 연구보고서, 대전세종포럼 등
180 홈페이지 소개

Ⅰ. 기관소개



01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95호)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조례(제4784호)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제867호)

| 목 적 |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 등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 · 분석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기능 |

-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라 한다)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상생협력 정책의 조사 및 연구
- 대전시와 세종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 지방행정, 지역경제 진흥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 · 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출판 · 배포
-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대전시와 세종시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 수립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 협력 및 해외 자료와의 비교 · 연구
- 행정기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02 연혁

2000.11.04.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공포
2001.02.28. 행정자치부 설립 허가
2001.03.05. 초대원장 한연동 취임
2001.03.08. 재단법인 대전발전연구원 설립등기
2001.03.14. 대전발전연구원 개원(시청사 20층)
2004.03.08. 제2대 원장 박광섭 취임
2006.06.16. 대전경제교육센터 설립
2006.09.11. 제3대 원장 육동일 취임
2008.08.01. 연구원 이전(대전도시철도공사)
2009.10.01. 제4대 원장 유병로 취임
2010.07.13. 제5대 원장 이창기 취임
2011.03.14.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설립
2012.02.15. 대전도시안전디자인센터 설립
2012.03.20. 대전성별영향평가분석센터 설립
2012.08.29. 사회적자본연구센터 설립
2013.01.01. 도시재생연구센터 설립
2013.04.01. 연구원 이전(구 충남도청 충남도의회)
2013.07.13. 제6대 원장 이창기 취임
2014.08.25. 제7대 원장 유재일 취임
2014.12.05. 경제사회지표조사와 사회적자본연구센터,
균형발전과 도시 재생연구센터 확대 개편
2015.06.24.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2015.12.30. 과학도시연구센터 설립
2016.10.31. 대전세종연구원 개원

03 주요현황

| 조직도 |

| 인원 |

구분	원장	연구직			관리직	계
		선임연구위원	책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인원	1	8	11	9	6	35

04 비전 및 미션

MISSION

시민과 함께하는
창의적 연구 수행

VISION

시민행복과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글로컬 연구기관

목표 및 전략

글로벌 도시 정책연구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모델창안
국제적 지식정보나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연구역량 확보

적실성 높은 시정연구

현장중심의 맞춤형 정책개발
시민참여의 정책네트워크 구축
대전 세종 상생발전모델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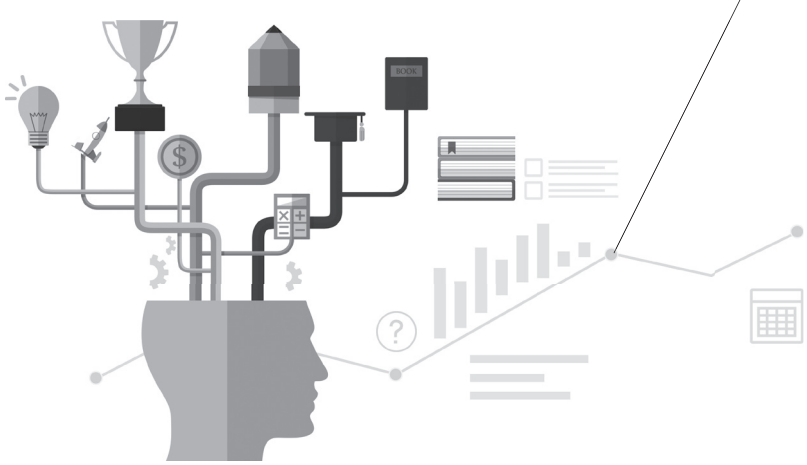
열정과 창의의 조직혁신

윤리경영확립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 조성
경영관리시스템 혁신

공정과 투명

신뢰와 소통

II. 연구원행사



01 연구원행사

대전–세종 상생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일시 | 2016. 1. 15. 11:00
주제 | 대전–세종 상생발전 : 전략과 과제
주최 | 지역정책포럼, 대전일보, 대전발전연구원
장소 | 대전일보사 편집국 회의실

창조적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16 상생협력 컨퍼런스 행사 개최

일시 | 2016. 1. 21 10:30
주제 | 창조적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조 협업 시스템 구축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대전광역시
장소 | 대전호텔 ICC 컨벤션홀

제1회 경제활력포럼 및 제1회 과학도시포럼 개최

일시 | 2016. 1. 28. 15:00
주제 | 2016년 대전광역시 과학경제 발전의 비전과 과제
주최 | 경제활력포럼, 과학도시포럼, 대전발전연구원 경제사회 지표조사와 사회적자본연구센터, 대전발전연구원 과학도시센터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제8회 미래기획포럼 개최

일시 | 2016. 1. 28. 17:00
주제 | 2015년 한국사회의 전망과 과제 :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지역정책포럼, 한국지방정치학회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국가균형발전 12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

일시 | 2016. 1. 29. 11:00
주제 |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서울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노무현재단
장소 |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제2회 과학도시포럼 개최

일시 | 2016. 2. 4. 10:30
주제 | 대덕특구의 위기와 기회
주최 | 과학도시포럼, 대전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의회, 이상민국회법사위원장실, 한국과총대전지역연합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주관 | 대전발전연구원 과학도시연구센터
장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층 컨퍼런스홀

제9회 대전미래기획포럼 개최

일시 | 2016. 2. 19. 17:00
주제 |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탐색한다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지역정책포럼, 한국지방정치학회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2016 대전발전의 전략과 과제 정책워크숍 개최

일시 | 2016. 2. 23. 13:30
주제 | 2016년 대전시 시정 방향과 실국별 주요 사업 검토,
2016년 대전발전의 전략과 실천과제 숙의,
2016년 주요 과제들에 대한 연구전략 마련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지역정책포럼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2016 성평등경제포럼 개최

일시 | 2016. 3. 11. 10:30
주제 | 경쟁과 이윤 극대화의 경제를 다시 생각한다
– 젠더와 대안경제
주최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장소 | 옛 충남도청 소회의실

대전트램 추진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일시 | 2016. 3. 15. 14:00
주제 | 도시철도 2호서 트램의 원활한 추진과 바람직한
도입을 위한 토론
주최 | 대전광역시의회, 먼저가슴 교통문화운동 시민모임,
대한교통학회 대전충청지회, 대전발전연구원
장소 |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

대전세종상생포럼 개최

일시 | 2016. 3. 16. 16:00
주제 | 대전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3층 소회의실

제10회 대전미래기획포럼 개최

일시 | 2016. 3. 17. 17:00
주제 | 미래 도시의 꿈 행복도시 세종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지역정책포럼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환경성질환 조사결과 및 개선대책 세미나 개최

일시 | 2016. 3. 23. 14:00
주제 | 대전광역시 환경성질환 조사결과 및 개선대책
주최 | 대전광역시,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장소 |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

제1회 젠더콜로키움

일시 | 2016. 3. 25. 10:30
주제 | 밋밋한 사고에 주름을 잡다
– 가족정책을 통해 본 복지체제 재구성과 변화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2층 소회의실

시 정책자문단 전문가 콜로키움

일시 | 2016. 4. 5.~22. 17:00
주제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2016년도 연구사업 방향 및 대전세종연구원 설립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제11회 대전미래기획포럼 개최

일시 | 2016. 4. 15. 17:00
주제 | 우리시대의 정의와 평화는 무엇인가?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지역정책포럼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제1차 대전여성정책포럼 개최

일시 | 2016. 4. 21. 11:30
주제 | 대전·세종지역 여성정책 전문가 포럼출범 및 위촉장 수여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유성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성과보고 및 심포지움 개최

일시 | 2016. 4. 22. 14:00
주제 | 범죄예방을 위한 통섭적 접근 : CPTED 가이드라인 및 IT활용실태
주최 | 유성구청
주관 |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
장소 | 유성구청 4층 대회의실

일본 지역신문을 통해 본 한국 지역언론의 혁신 방안 세미나 개최

일시 | 2016. 4. 22. 14:00
주제 | 일본 지역신문을 통해 본 한국 지역언론의 혁신 방안
주최 | 대전언론문화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스포츠산업 융복합 산업을 활용한 대전 경제 활성화 전략 세미나 개최

일시 | 2016. 4. 27. 15:00

주제 | 스포츠산업 융복합 산업을 활용한 대전 경제 활성화 전략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 충남대스포츠융복합산업연구소 대전체육포럼

주관 | 충남대스포츠산업융복합연구소, 대전체육포럼

장소 | 충남대학교 취봉홀

제2회 경제활력포럼 개최

일시 | 2016. 4. 27. 14:00

주제 | 청년취업과 창업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

주최 | 경제활력포럼,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발전연구원 경제사회지표조사와 사회적자본연구센터,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대전테크노파크, 창업진흥원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제20대 총선 평가와 대전충청지역의 정치변화 학술회의 개최

일시 | 2016. 4. 28. 13:50

주제 | 제20대 총선 평가와 대전충청지역의 정치변화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지방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충청지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충청지회,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장소 | 배재대학교 21세기관 515호, 506호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세미나 개최

일시 | 2016. 5. 10. 10:00

주제 |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으로서 CPTED의 역할

주최 | 한국디자인진흥원 중부권디자인지원센터

주관 |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장소 | 유성 인터시티 호텔

지방자치 부활 25주년의 과제 세미나 개최

일시 | 2016. 5. 12. 14:00
주제 | 지방자치 부활 25주년의 과제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장소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의동 201호

제12회 미래기획포럼 개최

일시 | 2016. 5. 13. 15:00
주제 | 한국의 희망, 무엇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언론문화연구원, 목요언론인클럽, 지역정책포럼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제2회 젠더콜로키움 개최

일시 | 2016. 5. 27. 10:00
주제 | 밋밋한 사고에 주름을 잡다
– 대중문화 속의 다양한 젠더 담론 탐색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주관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3층 소회의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활용성 제고를 위한 안전 CT 융합 기술 콜로키움 개최

일시 | 2016. 5. 27.~28. 17:00
주제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활용성 제고 방안에 관한 논의
주최 | 안전ICT융합지원센터, 목원대 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
주관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대전발전연구원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장소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태백) 대회의실

대전광역시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발전전략 세미나 개최

일시 | 2016. 5. 28. 13:30
주제 | 대전광역시 산업구조변화와 산업발전전략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국제협력단
장소 |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

제3회 경제활력포럼 개최

일시 | 2016. 6. 8. 10:00
주제 | 대전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 방안
주최 | 김경훈 대전광역시의원, 경제활력포럼, 대전학연구회,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대전발전연구원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구조조정기, 대전충남경제의 잠재 리스크와 향후 진로 세미나 개최

일시 | 2016. 6. 8. 16:00
주제 | 구조조정기, 대전충남경제의 잠재 리스크와 향후 진로
주최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발전연구원, 충남연구원
장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5층 강당

일 · 가정 양립 정책 활성화 포럼 개최

일시 | 2016. 6. 8. 15:30
주제 | 일 · 가정양립 정책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주최 | 대전광역시
주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장소 |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

민선6기 대전시정 후반기의 정책과제 워크숍 개최

일시 | 2016. 6. 8. 17:00
주제 | 민선6기 대전시정 후반기 정책과제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포럼 개최

일시 | 2016. 6. 9. 14:00
주제 | 2016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포럼
– 유선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주최 | 대전광역시
주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6 · 10 민주항쟁 29주년 기념 심포지엄

일시 | 2016. 6. 10. 14:50
주제 | 6 · 10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계승 · 발전
주최 |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지역정책포럼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제13회 대전미래기획포럼 개최

일시 | 2016. 6. 10. 17:00
주제 | 한국 민주화운동의 회고와 성찰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역정책포럼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제3회 과학도시포럼 개최

일시 | 2016. 6. 24. 10:30
주제 | 특허허브도시 대전 어떻게 만들것인가?
주최 | 이상민 국회의원실, 과학도시포럼, 대전발전연구원
주관 | 대전경제교육센터, 대전과학도시연구센터
장소 | 대전시 의회 세미나실

제4회 과학도시포럼 개최

일시 | 2016. 6. 28. 14:00
주제 | 지속가능한 스마트 과학도시 발전방향성과 과제
주최 | 과학도시포럼,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화학연구원,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장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층 컨퍼런스홀

지역에서의 통일교육과 지자체 연계방안 토론회

일시 | 2016. 6. 29. 16:00
주제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통일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지역에서의 통일교육과 지자체 연계방안 모색
주최 | 대전지역통일교육센터, 대전북한이탈주민협의회, 대전발전연구원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자동심장충격기(AED) 행정전문가 콜로키움 개최

일시 | 2016. 7. 14. 14:00
주제 |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정책방향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주관 | 목원대 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 ㈜MS Vison
장소 | 목원대 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

제3회 젠더콜로키움 개최

일시 | 2016. 7. 15. 10:00
주제 | '밋밋한 사고에 주름을 잡다 – 새로운 인식과 다양한 관계 그리고 사회적 장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주관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3층 소회의실

제2회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개최

일시 | 2016. 7. 15. 16:00
주제 | 대전과 세종의 여성친화도시정책 아젠다 발굴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주관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3층 소회의실

제5회 과학도시포럼, 제2회 도시재생포럼 개최

일시 | 2016. 6. 2. 16:00
주제 | 시민참여 도시실험실, 어떻게 가능한가? :
과학기술과 도시재생의 만남
주최 | 사회–기술혁신네트워크, 과학도시포럼, 도시재생포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지역정책포럼
대전발전연구원
주관 | 대전발전연구원 과학도시연구센터 ·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제3회 대전여성정책포럼 개최

일시 | 2016. 8. 18. 11:30
주제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의 정책간담회
주최 | 대전세종상생포럼,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회의실

대전트램의 성공 모델과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

일시 | 2016. 8. 25. 10:15
주제 | 대전트램의 성공 모델과 정착 방안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정치학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지역정책포럼
주관 | 대한교통학회, 먼저가슴 교통문화운동 시민모임
장소 |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

시민의 소리, 공감의 정책 : 미래 대전을 상상하다 토론회 개최

일시 | 2016. 8. 25. 14:00
주제 | 시민의 소리, 공감의 정책 : 미래 대전을 상상하다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정치학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지역정책포럼
주관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역공동체활성화포럼, 마을활동가포럼,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사)공공, 청년고리
장소 |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

제4회 여성정책포럼 개최

일시 | 2016. 8. 26. 10:00
주제 | 평등하고 조화로운 대전 · 세종 여성의 삶을 희망한다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정치학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지역정책포럼
장소 |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한국정치와 지역주의 토론회 개최

일시 | 2016. 8. 26. 10:00
주제 | 한국정치와 지역주의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정치학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지역정책포럼
장소 | 한국정치학회
장소 |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

충청지역주의의 동태와 변화 토론회 개최

일시 | 2016. 8. 26. 13:20
주제 | 충청지역주의의 동태와 변화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정치학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지역정책포럼
주최 | 한국정치학회
장소 |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

지역조정제가 대안이다 :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한국적 함의 토론회 개최

일시 | 2016. 8. 26. 13:20
주제 |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조정제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정치학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지역정책포럼
주관 | 한국지방정치학회
장소 |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

제15회 미래기획포럼 개최

일시 | 2016. 8. 26. 17:30
주제 | 희망의 정치, 국민의 국회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정치학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지역정책포럼
주관 | 한국지방정치학회, 대전미래기획포럼
장소 |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

제6회 과학도시포럼 개최

일시 | 2016. 8. 26. 13:20
주제 | 대전의 글로벌 과학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정치학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지역정책포럼
주관 | 과학도시포럼,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제7회 과학도시포럼 개최

일시 | 2016. 8. 26. 15:25
주제 | 지방정부의 국제기구 운영전략 : 의의와 성과, 발전과제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정치학회, 대전시민사회구소, 지역정책포럼
주관 | 과학도시포럼, 세계과학도시연합,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한국국제정치학회, 서울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심장이 안전한 대전만들기 토론회 개최

일시 | 2016. 9. 21. 15:00
주제 | 대전시 자동심장충격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김동섭 시의원실, (주)엠에스비젼
장관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장소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1층 컨퍼런스홀

제4회 젠더콜로키움 개최

일시 | 2016. 9. 23. 14:00
주제 | 밋밋한 사고에 주름을 잡다 – 행복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효과 : 가구소득을 사용한 분석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주관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3층 소회의실

김영란법 시행과 지역 언론의 윤리 세니마 개최

일시 | 2016. 10. 5. 10:00
주제 | 김염란법 시행과 지역언론의 윤리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대전세종연구원 개원심포지움 개최

일시 | 2016. 10. 31. 15:00
주제 | 지방연구기관의 통합운영과 대전세종연구원의 비전
주최 | 대전세종연구원
장소 |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

원도심 도시재생 정책 특별자문 원탁토론회 개최

일시 | 2016. 10. 31. 15:00
주제 | 원도심 미래를 이야기하다
주최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장소 | 대전시민대학 보문산 1층 컨퍼런스 홀

핵폐기물 대책 정책 토론회 개최

일시 | 2016. 11. 1. 14:00
주제 | 대전 핵폐기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주최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환경운동연합
주관 |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장소 |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

제5회 경제활력포럼 개최

일시 | 2016. 11. 17. 10:00
주제 | 지역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 경제활력포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대전세종연구원
장소 |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

사회통합 워크숍 개최

일시 | 2016. 12. 1. 17:00
주제 | 사회통합을 위한 희망정책 발굴
주최 | 대전세종연구원
장소 |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

제6회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개최

일시 | 2016. 12. 8. 14:00
주제 | 2016 성 주류화 제도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운영
주최 | 대전광역시
주관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장소 | 대전도시공사 3층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품앗이 카페 풀꽃

Ⅲ. 연구과제요약

1. 자치행정 정책연구

- Ⅴ 대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 ·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Ⅴ 지역사회운동사 Ⅲ
- Ⅴ 대전형 행복지수 구축 방안
- Ⅴ 대전지역 노동자의 고용여건 Ⅰ
- Ⅴ 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거버넌스 구축 방안
- Ⅴ 대전 120콜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 Ⅴ 2030 대전 그랜드 플랜

대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박 노 동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대학, 지역사회, 지자체의 협력방안을 설정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연구의 필요성

- 대학은 인재양성과 지식창출의 요람으로 지역 발전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어 대학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음
-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해 지역대학 교육 및 교육 여건의 개선, 우수학생 우치 지원 및 졸업생 고용기회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계 확장 등과 같은 종합적인 지원 및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함

Ⅱ. 연구의 내용

● 지역과 대학협력에 관한 논의 및 사례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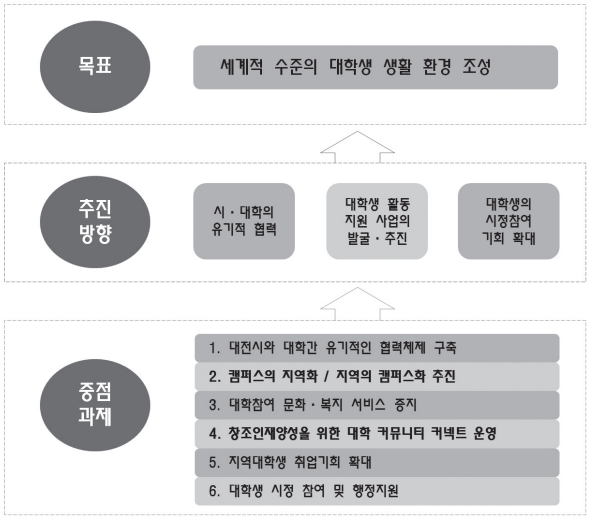
- 지역사회의 발전에 있어 지역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오늘날 지역사회와 지역대학간의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 및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음.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대학 시설 개방,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 개편, 사회로 대학공간의 확장 등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지역 인재 개발 시스템 구축도 나타나고 있음

● **지역대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 대전시는 대학이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목표하에 다양한 대학 협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하지만 대전시의 다양한 대학협력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아직까지 대학과 행정기관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 보완해야할 문제점이 존재함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대학협력의 목표 및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지역사회운동사 III

연구책임자 박 노 동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전지역사회운동사 3부에 해당하는 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운동과 사회적경제운동을 중심으로 후기산업사회에 대한 대전지역사회운동의 대응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의 필요성

- 사회적경제운동과 마을공동체운동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해 볼 필요성 제기
- 사회적경제운동과 마을공동체운동은 외부권력과 정치경제체제의 개혁을 지향하는 기존의 외부지향적 사회운동과는 운동이슈 및 방식에 있어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더 심층적 연구 필요

Ⅱ. 연구의 내용

● 풀뿌리공동체 운동의 형성과 전개 : 석교동, 중촌동, 법 · 중리동 사례

- 문제의식의 차원에서 석교동의 경우 교육과 보육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경제영역으로 확장을 보였줌. 중촌동은 성평등 문화의 생활세계로의 확산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경제영역으로 확장. 법 · 중리동의 경우 공공의료와 대안경제의 결합이라는 고민이 지속됨
- 전개 과정상 몇 가지 차원에서 차이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생활세계에서 대안체제의 실험이라는 사회운동의 일반적 특성을 보였줌.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제도화의 영향, 사회운동 흐름의 변화, 그리고 주체의 인식확장이라는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작용함

● 사회적 경제 운동의 형성과 전개

- 대전지역 소비조합운동은 1980년 중반 서대전 신협에 의해 일부 추진. 신협은 1970~80년대 한국 협동조합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신협은 협동조합 관련 교육뿐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점포형 소비자협동조합을 운영함
- 생협운동과 구분되는 자활공동체운동은 90년 중후반을 전후로 하여 대전지역에서도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상호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을 둔 지역화폐운동, 의료생협운동 등도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형성되기 시작
- 사회적경제운동의 확산기는 제도화를 통하여 확산되는 특징을 보여줌. 사회적기업육성법(2007년 1월) 및 협동조합기본법(2012년 12월) 등이 제정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지원으로 사회적경제영역이 양적으로 팽창한 점을 뚜렷한 특징으로 함

대전형 행복지수 구축 방안

연구책임자 박 노 동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시민의 행복 여건과 주관적 행복도,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행복지표 체계를 개발하는 것

● 연구의 필요성

• 모든 지자체에서 시민 행복 증진이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 행복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정의와 목표 설정 등을 위하여 행복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시도될 필요가 있음

Ⅱ. 연구의 내용

● 대전형 행복 지수의 정의

• 대전형 행복지수는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복지수라고 할 수 있음. 대전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결국 대전 시민의 행복관(幸福觀)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

● **대전형 행복지수의 특성**

- 행복의 개념적 요소 중 주관적 측면에 보다 중점
- 미래가치(예, 공유 및 소통, 공동체 활력, 네트워크 등)를 반영하여 정책지향점과 연계
- 시민의 구성적 특성(성, 연령 등)을 고려한 세부지표 설정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대전 행복지수 지표 선정**

구분	영역	지표	
		객관지표	주관지표
기본 지표	경제적 안정	가처분소득 / 고용률	소득만족도 / 일자리만족도
	건강과 주거	기대여명 / 주거비	주관적 건강만족도 스트레스인식도 / 주거환경만족도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시간 / 문화여가지출비율	문화여가활동만족도
	공동체 활력	가족관계접촉빈도 사회단체참여율 / 자원봉사참여율	가족관계만족도 / 사회적 유대정도 지역사회소속감 / 기부정도 / 사회적 신뢰도
	주관적 웰빙	–	전반적 삶의 만족도 / 긍정적 정서경험 부정적 정서경험
	삶의 질의 도시기반 (안전, 환경, 교통)	범죄율 / 교통사고발생율 미세먼지농도 / 온실가스배출량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 교통시설이용편리성 수질만족도 / 체감환경만족도
특성 지표	아동기	아동학대피해경험률 학교폭력발생률 / 학업성취도	교우관계만족도 / 학교생활만족도
	성인기	사교육비지출비율 / 평생교육접근성	
	노년기	연금수급률 / 장기요양보호율	

대전지역 노동자의 고용여건 Ⅰ

연구책임자 박 노 동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대전 지역의 노동자 고용여건을 양적 측면, 질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산업정책, 복지정책의 수립, 특히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함

● 연구의 필요성

- 대전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여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대전 지역에 최적화된 고용대책의 수립도 가능할 것이나 지역 차원에서의 고용여건에 대한 분석은 관련 자료의 한계 등의 이유로 인해 빈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심층 분석이 필요함

Ⅱ. 연구의 내용

● 고용여건 개념 및 변화 분석 논의 검토

- 대전시 노동자 범위 및 규모, 노동실태, 고용여건 등의 다양한 개념정의와 방법을 소개, 그에 따른 노동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특성을 파악
- 지역노동자의 고용실태, 규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을 소개하고, 개념에 따른 연구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
- 지역노동자의 복지참여, 생활실태, 빈곤화 경향의 결정요인을 장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틀을 이론적 자원에서 검토하고 제시함

● **대전지역 노동시장 주요 고용지표 분석**

- 지역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실태를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소득보장정책,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봄
- 지역노동자의 고용 실태와 정부의 지원정책 실태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 지역노동자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대전 고용여건의 변화상**

- 분석 결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사정은 별로 개선되지 못했으며 또한 대부분의 정책이 고용률 제고 등 고용의 양적 확대에만 맞추어짐으로써 고용의 질, 근로자의 삶의 질은 거의 개선되지 못했음.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의 확산, 고용안정성의 저하, 근로소득 성장의 지체 등이 이를 잘 반영함

● **지역 특화 고용대책 마련 시급**

- 지역별로 경제력의 차이, 산업구조의 차이가 존재할 뿐 아니라 공급되는 노동력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인적자본도 동일하지 않고 노동이동도 완전할 수 없으므로 이들 요인이 반영된 노동시장의 수급사정이나 노동시장의 성과 등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됨. 따라서 일자리정책도 이러한 지역별로 고유한 고용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립, 집행되어야 그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음

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책임자 최 길 수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의 적용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지역거버넌스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 연구의 필요성

- 저출산 · 고령화의 현황, 저출산 · 고령화가 미치는 파급효과, 저출산 · 고령화의 전반적인 추세, 대전광역시의 시청 공무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설문조사 · 분석,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의 구축방안 제시

Ⅱ. 연구의 내용

● 한국과 대전시의 저출산 · 고령화 추이, 대전시의 정책, 인구구조의 변화와 파금효과

● 고령사회에 대응에 대한 일반시민 및 대전광역시 본청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으로서,**
  - 우선 저출산 ·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시도에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전광역시 또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정하여 매년 저출산 · 고령사회시행계획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① 저출산 · 고령화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모형 설계, ② 거버넌스체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③ 거버넌스 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④ 참여집단의 역할 및 기능 정립, ⑤ 거버넌스체계의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 **저출산 ·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시도에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전광역시 또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정하여 매년 저출산 · 고령사회시행계획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저출산 ·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을 단위로 활동하는 많은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체계(저출산 · 고령사회대응민 · 관협의회)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의 주요한 행위주체인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NGO/NPO), 민간기업, 그리고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킹과 행위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대표성, 역할, 규칙) 구축
  - 저출산 · 고령사회가 가져올 제문제에 대해 민-관협치(거버넌스)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양한 민간 · 사회단체들이 참여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의 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 및 시행
  - 협의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의 추진단을 신설하여 운영

대전 120콜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최 길 수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전 120콜센터]는 효율적인 운영과 상담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품질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의 대중화와 다양한 민원 소통창구의 활용으로 콜센터 상담건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필요성 제기

● **연구의 필요성**

• [대전 120콜센터]의 운영 실태와 시민들의 인식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콜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

Ⅱ. 연구의 내용

● **콜센터에 관한 문헌고찰, 대전지역 콜센터 운영 현황, 대전 120콜센터에 대한 인지도 조사, 대전 120콜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대전 120콜센터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콜센터와 현업부서의 역할 재정립, 콜센터와 현업부서간 명확한 업무 구분, 콜센터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요구됨**

- **콜센터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CI(Corporate Identity) 개발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대전 120콜센터 홍보 등을 강화**

  • 대중매체를 통한 대전 120콜센터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① 대전시 공익 간판, ② 대전시 공익 디지털 전광판, ③ 홍보물 제작 및 매체를 통한 120센터 노출(79개동에 리플렛 배포), ④ 지하철 · 버스 승강장 · 택시 승강장 등에 포스터 부착, ⑤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및 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⑥ SNS 통한 젊은 층 홍보, ⑦ 의문문을 통한 홍보 등

- **[대전 120콜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전 120콜센터]와 대전시청 현업부서간의 명확한 업무구분이 필요하고, 양 조직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대전 120콜센터]와 대전시청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부서단위(시민봉사과)의 관리 · 감독을 뛰어 넘어 대전시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데, 자치법규(콜센터)를 통하여 운영조례에 "콜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 **[대전 120콜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력관리 및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함**

  • 콜센터 인력관리의 또 다른 측면은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이며,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업무역량은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제고시킴

- **[대전 120콜센터]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동 센터를 노출시키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전 120콜센터]의 인지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함

2030 대전 그랜드 플랜

연구책임자 기획조정실장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경제 환경 및 도시 환경 변화에 따라, 대전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기본계획, 도시의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장기계획, 도시의 전반적인 정책을 다루는 종합계획을 수립

● 연구의 필요성

• 저성장 기조 지속과 성장일변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대전 인구 및 공간 구조의 변화, 경제 및 산업환경의 변화, 도시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시민 수요의 변화로 시민과 공유할 미래계획의 필요성 대두

Ⅱ. 연구의 내용

● 비전 및 목표

• 비전 :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대전

• 3대 목표 : 창조와 혁신의 도시, 공유와 순환의 도시, 연대와 포용의 도시

● **계획의 범위**

• 기준년도 : 2015년, 목표연도 : 2030년

● **부문별 추진 지표**

• 경제 : 풍요로운 부자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GRDP 2만$→ 5만$, 지식기반서비스업비중(종사자수기준) 0.74% → 3.00%, 사회적 경제비중(GRDP 대비) 0.1% → 5.0% 추진

• 복지 : 서민 맞춤형 복지도시 달성을 위하여 생활보장 최저생계비 100% → 150%, 기혼여성대비 경력단절여성 23.7% → 12.0%, 국공립 · 공공형 어린이집 121개 → 243개 추진

• 안전 : 위기에 강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골든타임 확보율 93.4% → 95.0%, CPTED(범죄예방디자인) 적용면적 3.0% → 10.0%, 안전마을 조성건수 4건 → 20건 추진

• 문화 : 품격있는 과학문화도시를 위하여 예술활동지수 26.4 → 60.0, 연간 국제회의 유치건수 72건 → 120건, 평생학습 참여율 9% → 25% 추진

• 환경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하천수질(BOD, 갑천말단) 4.7㎎/L → 2.0㎎/L, 미세먼지(PM10) 농도 42㎍/㎥ → 36㎍/㎥, 온실가스 감축률 5.1% → 30.0% 추진

• 도시 : 서민 친화형 정주도시 조성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수 321개 → 600개, 공공임대주택 비율 7% → 20%, 녹색건축 건물 160개 → 500개 추진

• 교통 : 대중교통 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중교통 분담률 28.8% → 40.0%, 저상버스 보급률 18.1% → 50.0%, 교통사고 사망자수(인구10만명당) 5.9명 → 3.5명

2. 산업·경제 정책연구

- Ⅴ 지역R&D인력수급 미스매치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 Ⅴ 대전지역 중소기업 성장동인 분석과 정책방향
- Ⅴ 대전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성과검토와 효율적 지원방
- Ⅴ 도심지개발에 따른 소외된 농촌지역의 보존과 농업소득전략
- Ⅴ 특허법원 관할집중에 따른 대전시에 미치는 파급효과
- Ⅴ 대전지역기업의 형성과정에 성장과정에 대한 연구 Ⅲ
- Ⅴ 대덕특구 혁신네트워크 분석연구
- Ⅴ 대전지역 과학기술혁신환경 분석연구
- Ⅴ 대전의 글로벌 수준 과학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Ⅴ 민선6기 후반기의 환경변화와 전망

지역R&D인력수급 미스매치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책임자 강 영 주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최근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확대와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증대, 주변국의 적극적인 지역 인적자원 육성 시책의 추진 등 대외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지역 R&D인력 육성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 별 수급현황과 이동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R&D인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

● **연구의 필요성**

• 주요국의 지역 R&D인력 정책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지역 R&D 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

Ⅱ. 연구의 내용

● **대전의 R&D인력 부족률은 박사 1.8, 석사 5.0, 학사 2.7, 전문학사 3.1로 석사의 부족이 가장 심각, 부족 분야는 석박사의 경우 반도체, 바이오헬스, 화학, 전문학사/학사는 바이오헬스, 섬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소프트웨어 등임**

- **대전의 지역 내 취업비율은 49.5%, 수도권 유출 27%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보다 유출이 심각**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R&D인력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 R&D인력 정책을 지역 주도로 추진, 정부가 최근 수립 중인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16~'20)을 지역 차원의 과학기술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기본 틀로 활용

- **(지역 R&D인력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의 인력양성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기업,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지원 기관 등이 기관이 참여하는 '(가칭)지역 R&D인력 협력 플랫폼'과 실행 조직인 '(가칭)지역 인재 육성센터' 구축

- **(전략을 육성대상, 육성 단계별로 세분화)** 석박사인력은 지역주력 산업 혹은 전략산업의 수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교육강화, 대졸인력은 지역 기업 및 인력 관련 정보 제공, 인적자원 DB 구축, 지역 내 인턴십 강화. 고졸인력은 지역 내 취업지원을 위한 지원 강화

- **(단계별-양성, 취창업, 재직, 재취업- 전략의 수립)** 취창업단계는 지역 내 교육과 취업의 연계 강화, 직업 경험 기회의 강화, 취업정보 제공, 과학기술계열 재학생에 대한 일 경험 기회 제공을 확대. 재직단계는 우수인재의 지역 유치 및 지역산업 발전 기여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 **(지역 잠재 R&D인력의 활용 강화)**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구개발 인력, 여성 과학기술 인력 등의 활용 강화. 기타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 등 은퇴 고급 과학기술지식인력의 활용 증대

- **(지역 R&D인력 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 R&D인력의 양성, 취업, 창업 등 인적자원 수급과 관련된 주기적 실태조사와 분석 추진

대전지역 중소기업 성장동인 분석과 정책방향

연구책임자 김 기 희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전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

● 연구의 필요성

• 소기업에서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동인을 찾아 이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성장의 원활한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Ⅱ. 연구의 내용

● 비전 및 목표

• 업력 : 2005년 이전부터 중견기업이었던 계속중견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업력과 양(+)의 관계, 2005년 이후 신규중견기업들의 유의성 없음

- 규모 : 종업원수는 중소기업이 계속중견기업과 신규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이행에 모두 음(−)의 관계, 자본금은 계속중견기업은 성장과 음(−)의 관계, 신규중경기업은 양(+)의 관계
- 성장성 : 매출액 성장이 계속중견기업과 신규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이행에 모두 양(+)의 관계를 가짐. 해외시장으로의 수출비율 확대는 계속중견기업과 신규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이행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수익성 : 영업이익은 중견기업으로의 이행 성장에 계속중견기업은 양(+)의 관계, 신규중견기업은 음(−)의 관계
- 안정성 : 부채비율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부호는 음(−)의 관계
- 기술력 : 교육훈련비는 중견기업기업으로의 이행 성장에 계속중견기업은 양(+)의 관계, 신규중견기업은 유의하지 않음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기업의 업력 관련

-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자금조달이 원활하고 경영환경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함으로써 오랜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존립하게 해야 할 것임. 특히 창업에서 도약 · 성장기 중소기업이 흔히 겪게 되는 2차 3차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보완해야 할 것임

● 기업의 업력과 규모 관련

-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자금조달이 원활하고 경영환경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특히 창업에서 도약 · 성장기 중소기업이 흔히 겪게 되는 2차 3차 자금이 원할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보완해야 함

- 아직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행하지 못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경영이익 축적을 통하여 자본금 규모를 확장하게 하거나 비용절감이나 생산효율화를 통해 최적규모 영역으로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함

● **성장성 관련 : 매출액, 수출비율**

- 중소기업의 매출액의 빠른 성장이 중견기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있는 판매촉진과 마케팅 등의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지역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역제품 해외 제품설명회 개최 확대, WTA 등을 통한 지역기업이 해외 진출 확대 등을 국제 무역 및 통상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

● **수익성 관련 : 영업이익**

- 최근 중소기업으로부터 신규중견기업으로 이행 성장한 기업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안정단계에 있는 계속중견기업보다 영업이익을 크게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신규중견기업으로의 이행 촉진을 위해 영업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경업기법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안정성 관련 : 부채비율**

- 기업의 성장을 위해 부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경영다각화에 의한 다양한 금융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채권의 차입에 따른 자본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술력 관련 : 교육훈련비**

- 종업원당 교육훈련비를 일정비율 부문 직접 지원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수토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
- 히 종사자가 5인 미만인 영세 규모의 소기업은 기존 종업원이 교육훈련을 받을 만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교육 받는 기간만큼 임시 인력지원이나 전문가 집단의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등의 방법도 고려

대전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성과검토와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책임자 김 기 희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그간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도하고, 향후 정책자금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효율적 자금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활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연구의 필요성

• 그간 대전광역시에서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된 정책지원금에 대하여 실제로 중소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한 평가를 시도하고, 나아가 기업 입장에서 지원자금을 활용하면서 겪은 애로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자금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Ⅱ. 연구의 내용

● 정책자금 지원성과 조사

• 지원자금 활용도
  – 운전자금 43.6%, 시설자금 16.2%, 원자재 등 재료비 15.4%
  – 그러나 기술개발(5.3%)과 인력확보(3.8%) 활용 용도는 낮음

• 정책자금이 주요 경영지표에 미친 영향
  – 생산 : 매우 크다 33.3%, 대체로 크다 40.7%, 보통 22.2%
  – 매출 : 매우 크다 27.7%, 대체로 크다 36.9%, 보통 32.3%
  – 고용 : 매우 크다 13.3%, 대체로 크다 25.7%, 보통 41.9%

• 정책자금 융자 받기 전년도와 융자 받은 후년도의 경영지표 변화
  – 생산 : 기업당 2억5천2백만원 증가
  – 매출 : 기업당 1억9천8백만원 증가
  – 고용 : 기업당 0.77명 증가

Ⅲ. 정책건의

● 정책자금의 지원한도 등 확대 검토

• 경영안정자금의 지원한도 규모 확대
  – 현행 2~5억원인 기업당 우대금리와 일반금리 지원한도 규모를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규모 확대 검토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의 실제 지원실적은 2014년까지 계획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매우 저조하였으나 2015년에는 전액 소진되었음.
  – 따라서 2012년 대비 2016년 현재 30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2015년 계획금액 200억원이 모두 소진된 점을 감안하여 2016년도에도 모두 소진될 경우, 다시 계획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의 지원 규모 및 한도 조정

– 첫째, 현행 기업당 5억원인 지원한도를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이 방안은 1기업당 5억원도 상당 수준이므로 기업에 따라서는 상환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음
– 둘째, 2016년 현재 총지원규모가 300억원인데 매년 지원실적금액이 모두 소진되고 있는 만큼 총지원규모를 100억원 이상 증액하여 현행 지원조건으로 지원업체를 확대하는 방안
– 셋째 1기업당 지원한도를 3억 또는 4억으로 축소하고 대신 자금의 운용이나 상환내역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게 2차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 넷째, 융자기간을 현행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거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거나 일시상환도 2년 이상 상환으로 연장하는 방안

● 융자기간 연장 또는 이차보전율 상향 검토

•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연장 검토
– 현행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을 만기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또는 일시상환을 2년 이상 등으로 융자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이차보전율 상향 검토
– 이차보전 이자율을 우대기업이나 일반기업에 대하여 각각 현행 각각 2.5%,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그러나 2014년까지 총지원금액 300억원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200억원으로 감액한 이후 모두 소진된 점을 감안할 때, 이차보전율 상향을 검토할 경우에는 총지원금액 현행 200억원을 300억원 등으로 증액하여 더 많은 기업이 이용하려는 과당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 방향

• 향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자금지원 분야
– 운전자금 등 경영안정 44.0%, 창업지원 18.1%, 기술개발 8.9%, 신규설비투자 6.9%, 구조조정 6.6%, 생산성 향상 5.4% 순

• 가장 중요한 정책자금 개선안
– 긴급한 경영상황에 직면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자금 확대 23.3%
– 기업 부담금리 조정으로 금융비용 완화 23.3%
– 사회취약계층 특례보증 지원 19.1%
– 무담보 기술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15.3%, 지식서비스산업, 성장산업 등으로 지원업종 대폭 확대 13.6% 등

도심지개발에 따른 소외된 농촌지역의 보존과 농업소득전략

연구책임자 임 성 복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소외된 농촌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지금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특색있는 마을발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4개 마을을 중심으로 6차산업적 측면에서 농업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획기적인 환경개선을 통해서 농가의 고용 창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의 필요성

•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된 농촌지역에 대한 마을단위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마을단위의 사업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농업생산, 고부가가치화, 새로운 유통혁신 모색 등의 제반 경제활동 영역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Ⅱ. 연구의 내용

● 대상지역 마을조사

• 마을의 자원유형별(문화, 자연, 관광, 산업자원) 조사, 생산 및 소득창출 관련 사업 진단

● **대상 농촌지역 현황 및 추진 실태 파악**

• 동구 찬샘마을을 제외한 대전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무수천하마을, 세동밀쌈마을, 선창마을, 두메마을 등 4개 마을 대상

● **발전 방향 및 사업개선 과제**

• 경제사업 토대 마련, 사회 및 문화적 생활 환경 개선

• 관광(방문객) 편의시설 및 관련 서비스 확충

• 운영관리 개선

• 새로운 '공동체 환경'의 정비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무수천하마을**

• 고소득 특화작목 선정 육성, '치유의 숲' 연계, 상설 마을공동 농축산물직매장 설치 운영, 연꽃밭–마을 뒷산–보문산 자락 자연자원 탐방루트 정비, 민박시설 전통가옥 분위기 개선, 무수천하마을 꽃/나무/동물 등 소재 지정, 상징화 사업

● **선창마을**

• 영농조합/작목반 수익사업 확대 지원, 노적바위–송죽정 환경 정비–마을이미지 브랜드화, '보물섬식물원' 마을 관광자원화사업, 마을입구–역사문화공간–체험공간에 꽃(나무) 단장, 혁신적인 마을리더 육성–지속적인 마을 발전 비전 추진

● **밀쌈마을**

• 상세동지역 고소득 특화작목 선정 및 생산단지 조성, 밀 재배단지 확대, 상세동 마을

조망(View) 포인트 선정, 용추(용동바위), 백운봉, 아들바위, 살목재 돌담길 등 소토리텔링 발굴, 황토방 시설 보강, 민박참여 농가 확대, 상시 승마체험장 시설 확충, 마을발전 기획 전문가 지원 시스템 제공

- **두메마을**
  - 전통발효식품 마을소득 증대사업, 다랑이논, 담배건조장 전통농경문화 보존사업 전개, 마을 대보름제 홍보 확대 시민참여 증대, 대청호변 오토캠핑장 설치, 대청호 1박2일 힐링에코여행 홍보 확대

특허법원 관할집중에 따른 대전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책임자 임 성 복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특허 환경변화가 대전지역에 미칠 영향력을 판단하고 특허 허브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전략을 마련

● 연구의 필요성

- 지역내 특허,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특허 허브도시로서의 브랜드 강화 및 경제적 유발효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코자함

Ⅱ. 연구의 내용

● '특허허브도시 대전' 거버넌스체계 구축

- 대전광역시가 각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가치를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산업 및 정책과의 협치 및 조율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대전의 산업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전의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특허전문화지구 지정 육성**
  - 지역내에 분산해서 분포해 있는 다양한 특허 관련 혁신주체들의 입지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중심적인 기능공간으로서 특허행정, IP창출, 교육 · 홍보, 사업화지구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전문화지구(특허특화지구)(존 : Zone)를 설정하고, 전문화지구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입지를 특화해서 유도해 나감
- **교육 및 홍보 확산**
  - 대전이 지금까지의 도시 이미지로 구축되어 왔던 과학도시의 이미지와 함께 새로운 한가지 이미지 축으로서 특허허브도시로서의 대전 이미지를 지향하는 시민공감과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
-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지식재산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화 및 집중육성, 포럼의 경제적 가치 및 대전의 MICE산업 연계 강화, 지식재산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 등 방안 제시**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추진사업 제안 및 로드맵 작성 제시**
- **추진사업 제안**
  -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사무국 설립 및 특허허브도시 진흥재단 설립
  - 특허 전문화지구 지정 육성 : 특허전문화지구 선정, 수도권 관련기관 및 사업체 유치, 특허청 협력사업 추진, 특허법원 국제특허관할 확대
  - 교육 및 홍보 확산 : 지식재산 교육사업, 특허허브도시 대전 홍보 확산 사업
  - 특허허브도시 브랜드 구축/특허허브포털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전문기관 역량 강화 : 대전지식재산센터 위상 제고, 국제적 전문 지적재산권연구기관 설립

대전지역기업의 형성과정에 성장과정에 대한 연구 III

연구책임자 임 성 복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연구한 기업성장사 1 · 2차의 연구성과에 기초해서 대전지역 기업사(기업가사)연구의 기초적 작업의 성격을 가지며, 외환위기 이후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성장한 첨단기술과 지식기반의 신성장산업 기업군들의 성장모델을 조사 연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함

● 연구의 필요성

• 지역에 있어서 산업발전 과정에서 기업이 설립되고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기업가(자본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하는 부분은 해당 지역의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규명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임

Ⅱ. 연구의 내용

● 1990년대 후반기 이후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태동, 성장해온 첨단기술기업군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형성 및 성장사를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대전 경제의 발전 과정과 발전의 내재적, 외생적 계기를 파악함

- **지역 기업의 형성 과정(자본축적 과정) 및 성장 과정(기업 경영), 소멸 과정**
  - 대덕연구단지 기반 개발기술의 기술사업화에 의해 창업한 벤처기업
  - 제1,2세대 가업을 승계한 제3세대 계승기업
  - 제3세대 창업기업
  - 미래 대전경제를 선도할 신성장동력 기업
- **지역기업의 형성과 성장과정을 통하여 대전 경제의 성격 및 특징 변화 규명**
- **제1,2세대와 제3세대 기업과의 차이 및 특징 규명**
- **대전지역 기업의 기업가 정신**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대전의 지역대표 기업 선정**
  - (주)젬백스 앤 카엘 • (주)알에프세미 • 인텍플러스 • 아이쓰리시스템(i3system)
  - 아이디스(IDIS) • 바이오니아 • (주)중앙백신연구소 • (주)뉴로스
- **추진사업 제안**
  - 대전의 기업생태계 진단–대전광역시 경제정책, 지역경제 현황 및 특성 분석, 대덕연구단지–대덕특구, 대학의 연구개발, 금융지원, 각종 연구개발지원사업 평가
  - 과학도시 대전의 도시정체성 성과와 한계 진단–과학도시 정체성 진화 과정 분석, 과학도시 정체성 확립의 한계 및 과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필요성 제기

대덕특구 혁신네트워크 분석연구

연구책임자 황 혜 란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덕특구 내 지식생산에 있어 혁신주체 간 연계를 통한 공동지식생산의 정도와 밀도 분석
- 지역내 지식생산의 주도 주체 및 주체간 관계를 주도하는 매개역할주체, 지역내 혁신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혁신주체 간 공동지식생산 활성화 정책 방향성 도출

● 연구의 필요성

- 대덕특구가 2004년 지정, 육성되면서 첨단벤처생태계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와의 연계 고리 형성이 중요해 짐에 따라 산학연 혁신주체 간 협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 그러나 2010년대 초반 이후 산학연 연계의 빈도와 질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혁신네트워크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Ⅱ. 연구의 내용

● 국내특허분석

- 네트워크 중앙성 분석결과 대덕특구 내 출연연과 연구중심대학의 역할이 중요, 매개역할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분야별로 ICT: ETRI, KAIST, 충남대가 중요역할, 매개역할 / BT의 경우 생명연, KAIST, 충남대 등 공공기관 외 바이오리더스, 중앙백신연구소 등 지역 내 기업의 영향력 큼, 민간기업의 매개역할은 크지 않음

● **미국특허분석**

- 국내특허와 달리 지역 내 대학 및 출연연의 역할과 함께 삼성전자, SKT등 통신대기업과 지역 외 대학의 네트워크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그러나 이들 외부 혁신주체는 네트워크 내에서 매개역할은 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ICT의 경우 전체적인 경향과 맥락을 같이하나, BT의 경우에는 지역 내 출연연, 대학과 지역 내 바이오 대기업 연구기관, 벤처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이 활발

● **정책적 함의**

- 국내특허 공동출원은 지역 내 혁신주체들의 활동성과 매개성이 높게 나타남. 이에 비해, 미국특허 공동출원의 경우 지역 외부주체, 특히 대기업 의 활동성이 높게 나타나지만 매개역할은 소극적으로 나타나 대덕의 지식자원이 전국적으로 활용됨
- 산업분야별로 보면 ICT의 경우 지역기업들은 공공연구부문과 국내특허의 공동출원 등 활발한 반면 미국특허 공동출원 등의 역량과 수요는 미흡, BT산업의 경우 지역 내 벤처 1세대기업, 대기업의 연구기관입지로 공동 지식생산의 밀도가 높음. 대기업 연구기관의 수도권 이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정책제안**

- 지식재산–연구개발 연계를 통한 공동지식창출의 활성화: 국내특허 분석에서 대전의

공동출원 정도가 전국 평균 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대전의 특허출원의 주요 주체인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전략의 영향력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전의 기업 간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원활동이 필요

- 지식창출주체의 역량 강화: 미국특허와 같이 질적인 수준이 높은 지식 재산의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기업의 지식흡수와 창출역량 지원 위해 '지식재산권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 지원. 또한 지역첨단기업 수요에 기반한 IP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의 '지역기업 연계형 IP 창출 연구개발' 등을 지원
- 산업분야별 특수성에 입각한 지식창출전략의 수립: ICT분야의 경우 지역 내 플랫폼 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공동특허 출원 등 지식생산의 질적 고도화 도모 필요. 바이오분야의 경우 상대 적으로 활발한 공동지식생산을 지속하고, 이러한 시스템 보완을 위해 연구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IP기반 창업화를 추진 하는 '조직기반 무위험 창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있음

대전지역 과학기술혁신환경 분석연구

연구책임자 황 혜 란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전 지역관점에서의 혁신환경 분석: 연구개발 자원의 투입과 산출, 정책, 성과, 혁신시스템 특성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 및 가공을 통한 대전 증거기반 과학기술정책 수립의 기반 구축

● 연구의 필요성

• 대전이 국가연구개발수행을 담당하는 연구기관들의 물리적 집적지를 넘어 산학연 주체의 지식생산과 확산, 사업화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혁신집적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투자되는 자원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

Ⅱ. 연구의 내용

● 대전의 지역혁신시스템 특성 분석

• 대전은 출연연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착시

효과로 인해 지역과학기술예산의 측면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낮은 역차별 존재

- 또한 대전에 투입되는 연구개발예산 중 70%는 역외로 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산학연 협력 활동의 급격한 감소,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과학기술투자 비중 등 지자체의 과학기술 지원체계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있음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지방과학기술 예산 증액과 국비확보 노력

- 국가대표 과학도시에 걸맞는 수준의 지방과학기술 예산 배분을 전략적 차원에서 대폭 증액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기획역량의 확충이 필요

● 산학연 협력 등 혁신의 사회적 자본 확충

- 기업의 역량과 수요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산학연 협력의 비전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자산화에 역점을 둠으로써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 지역기반 혁신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 과학기술관련 조례 확충과 지역기반 과학기술 거버넌스 정비를 통한 지역 수요와 발전 단계에 걸맞는 지역혁신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 시스템 구축

대전의 글로벌 수준 과학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연구책임자 황 혜 란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고유한 성장모델 제시를 위해 다차원적 검토를 목적으로 함. 국가혁신체제 차원에서는 기초 원천 연구성과의 사업화 모델, 지역혁신체제 차원에서는 지역혁신자산 축적을 위한 방법론의 하나로서의 엔지니어링 센터 모델 검토, 연구개발 인력의 구조 변화와 향후 연구역량에의 함의 검토, 마지막으로 공간 측면에서는 대덕의 과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간설계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연구의 필요성

•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연구 기관의 물리적 집적지를 넘어 공간과 지역을 매개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고유의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대전의 공간 설계, 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 축적 등의 전략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Ⅱ. 연구의 내용

●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전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자산의 축적을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전략방향을 도출

- 기초 · 원천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허브모델 구축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과학기술 성과를 지역경제로 연계시키기 위한 엔지니어링 센터 등 지역기반의 과학기술 연계 거버넌스 구축
- 과학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공간설계
- 인력의 환류시스템을 통한 과학기술기반 사회적 자본의 축적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개발 허브모델 정립**
  -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 및 지식재산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허브모델
- **지역기반 기술사업화 거버넌스 구축**
  - 지역기반의 통합적 기술사업화 거버넌스와 지역기업의 공통기술기반 확대를 위한 엔지니어링 센터 등 매개조직 육성
- **과학문화를 연계한 과학도시 공간설계**
  - 대덕특구 과학문화 어울림길 등 과학문화 컨셉을 연계한 과학도시 공간 설계
- **인적자본 순환을 통한 사회적 자본 구축**
  - 진입인력과 은퇴인력까지를 포함한 과학기술인력 환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적자본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사회적 자본 구축

민선6기 후반기의 환경변화와 전망

연구책임자 황 혜 란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민선6기 전반기 시정 평가와 지역 내 · 외 환경의 변화를 고려, 후반기의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

● 연구의 필요성

• 민선6기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변화하는 경제, 사회, 도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시정 방향과 추진 과제 도출이 필요

Ⅱ. 연구의 내용

● 민선 6기 후반기 환경변화

• 20대 총선결과로 정치지형의 변화,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대응 필요성 부상, 사회경제 문제 심화로 도시의 새로운 기능 요청, 도시의 기능변화와 도시민의 수요변화에 따른 네트워크 거버넌스 필요성 부상, 과학기술의 고도발전과 혁신적 활용방안 요구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안착

- 미래 신성장 동력의 확충과 공유경제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안착. 미래 산업으로 스마트 제조혁신, 소프트웨어 융합, 신재생(수소)혁신 인프라 건설. 공유경제는 소셜벤처 육성, 사회–기술 혁신 시스템 정립

● 사회의 안전포용

- 청년문제에 종합적 대응위한 포괄적 청년정책의 수립 필요
- 시민복지 기준선 구현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정책 지원
-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추진
-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기획

● 도시 인프라

- 시장 기반의 도심재생과 더불어 시민참여와 사회적경제 조직을 연계한 공유 네트워크 기반의 도심재생 정책의 추진
- 도시철도 트램 추진 등 대중교통 중심,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
-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빗물순환 등 물관리 선도도시 모델 개발
- 시민참여형 스마트 과학도시 모델 개발을 통한 디지털 시민과학문화 정립과 미래 과학도시 선도 모델 기획

● 시민도시를 위한 협치행정

- 시민행복위원회 등 시민 협치행정 정착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여 시민 시정참여 방법론 연구 및 실험, 시민참여의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협치 코디네이터 등 제도적 기반 확대

3. 복지여성 정책연구

- Ⅴ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연구
- Ⅴ 대전지역 체류 이주민 현황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Ⅴ 안전분야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 Ⅴ 대전시 입양가족 실태조사 및 가족지원서비스 개발 연구
- Ⅴ 대전지역 자활사업 생산품 및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Ⅴ 대전시 성평등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Ⅱ
- Ⅴ 대전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 파악 및 사업 발굴
- Ⅴ 2016 대전여성가족통계
- Ⅴ 대전시 양성평등정책 현황 및 효과 분석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연구

연구책임자 류 유 선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질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의 정책 기여도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

● 연구의 필요성

-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실시한 이래로, 대전광역시는 총 3,370회의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제도 자체에 있어서 양적인 성장을 거둠과 동시에 제도의 정착이 가시화되고 있음.
-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가 지역의 성평등과 연동된다기보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기관 총괄담당자의 책임과 열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질적분석의 심화와 정책개선 환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Ⅱ. 연구의 내용

● 2013~2015 대전지역 기관별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제출 과제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원안동의	개선의견	계	원안동의	개선의견	계	원안동의	개선의견	계
총계	487	12	499	556	2	558	596	9	606
대전광역시 본청	110	3	113	106	2	108	122	0	123[1)]
5개 구청	377	9	386	450	0	450	474	9	483
동구	78	0	78	112	0	112	112	1	113
중구	72	9	81	58	0	58	61	0	61
서구	85	0	85	88	0	88	125	0	125
유성구	70	0	70	99	0	99	89	0	89
대덕구	72	0	72	93	0	93	87	8	95

● 대전지역 정책개선 사례 선정과정

시기	단계 및 내용	
9/6	연구진회의	정책개선 사례 선정을 위한 연구진 회의
9/13	이행점검서양식 작성	정책개선 대상과제의 이행점검서 양식 작성
9/27	이행점검서작성 요청 공문 시행	공문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이행점검서 작성 요청 건
10/4	체크리스트 수합 및 제출	각 부서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담당자가 담당 사업에 대해 체크리스트 기입하고 제출
10/24	이행점검서작성 추가 요청 공문 시행	공문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히애점검서 작성 추가 요청 건
10/31	체크리스트 수합 및 제출	각 부서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담당자가 담당 사업에 대해 체크리스트 기입하고 제출
11/1	정책개선 사례 전문가 검토 회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및 전문가들이 정책개선 사례 검토 및 개선방안 협의

1) + 제외 1건 포함.

2013~2015 대전지역 정책개선 사례 목록

연번	관리번호	과제명	비고
1	2013C대전060	건강가정 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	2013C대전066	북한이탈주민 지원(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	
3	2013C대전070	다문화가족 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	2013C대전중구023	뿌리공원 확장 조성 사업	
5	2013C대전중구033	광고물 관리	
6	2013C대전중구040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7	2013C대전중구050	자활 근로	
8	2013C대전중구071	실버 청결 도우미 사업	
9	2013C대전중구072	사랑 가득 목요 천원 콘서트	
10	2013C대전중구074	행정대집행운영(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처리)	
11	2013C대전중구085	영유아 보육 지원	
12	2013C대전중구090	지방공무원 전문행정인 육성	
13	2014C대전002	고향의 강 하천환경 정비(진잠천) 자치단체 자본보조	제외
14	2014C대전003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	
15	2015C대전동구015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6	2015C대전대덕046	자원봉사 활성화(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7	2015C대전대덕048	대청 문화 전시관 운영	
18	2015C대전대덕052	여권 발급 운영	
19	2015C대전대덕057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 운영)	
20	2015C대전대덕060	도시 농업 육성 및 지원	
21	2015C대전대덕081	도로명 주소 정착(도로명 주소 활성화 사업)	
22	2015C대전대덕086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23	2015C대전대덕088	신탄진 평생학습도서관 청사 유지 관리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근본적 이해
- 젠더개념과 젠더감수성 교육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주체인 공무원의 자발성과 책임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전담 공무원 확보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시스템 보완

대전지역 체류 이주민 현황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류 유 선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국내 이주민 유입 역사가 20여년을 넘어가면서, 대전지역의 이주민 규모의 증가와 함께,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이주민 내부의 다양성도 확대되고 있음. 지역주민의 인구학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 · 경제 · 문화적 다양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다문화 및 이주민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대전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주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필요성

• 자본과 상품,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이주의 시대'에 대전지역에도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음. 2015년 현재, 대전지역 외국인은 총 25,190명(여:14,426명/남:10,764명), 대전에 등록한 총인구 1,531,809명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로, 대전 지역 60명 가운데 한 명이 이주민임. 2006년 8,167명이었던 대전 이주민의 수는 2015년 25,190명으로 10년 만에 약 3배가 증가

• 사회통합을 목표로 다양한 다문화 관련법과 정책, 그리고 사업을 수립 · 수행해왔음. 그러나 국가차원의 거시적 정책이나 법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잔여적 대상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런 맥락에서 지역사회의 조건과 맥락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과 사업이 필요

- 체류 이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결혼이주여성 이외에 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외국국적동포, 이주노동자와 난민, 이주아동 등 이주민의 범주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의 확장과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특히 지역민들과 직접 대면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산업경제적 특성이나 조건, 그리고 이주민과 선주민의 특성에 맞게 정책감수성을 키워야할 필요성 있음

II. 연구의 내용

- 다문화 관련 공무원 6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5명, 그리고 이주활동가 5명, 총 16명의 대전지역의 이주민 현황 및 필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대전지역의 다문화 혹은 이주민의 특성은 인근 충남지역과 다르게 노동형태와 사회 · 문화 · 교육 · 건강 서비스 인프라 및 접근성 차원에서 '도시형'다문화로 개념화할 수 있고, 지역에 맞는 도시형 다문화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대전지역 체류이주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유학생에 대한 중장기정책이 필요함.
-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으로 이뤄진 다문화가족의 내적 다양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사별과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도 증가하고 있고, 이주노동자 가족, 난민가족 등 다문화가족의 결합방식과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음
- 증가하는 이주아동들이 공교육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및 학교문화 적응 프로그램과 함께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현장의 인식개선도 시급함
- 대전지역의 영세 제조업 및 농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미등록 포함) 및 이들 가족에 대한 의료 · 건강 · 교육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약하여, 제도 보완 필요
- 여성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들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문제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취약함. 법률적 상담이나 심리적 상담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결혼이주여성에 집중하는 '다문화' 정책에서 이주아동(중도입국자녀, 해외장기체류아동, 난민, 미등록이주아동 등), 이주노동자(미등록 포함), 유학생, 난민 등 대전지역 체류 이주민 정책으로 전환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학업, 노동, 결혼 등 이주 목적에 상관없이 대전에 체류하는 이주민을 지역민으로 수용하는 포용적 정책의 필요하며,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전지역의 이주민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맞춤형 중장기 이주민정책을 생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주민 실태 조사가 필요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사회의 차이와 다름을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인정하고 승인하는 지속적인 다문화인식 개선 운동과 이를 위한 지자체 예산의 확보 요구됨
- 여성 결혼이주민, 여성 이주노동자, 여성 유학생 등 여성이주민을 위한 심리상담을 전담할 지원센터의 활성화 필요

안전분야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책임자 류 유 선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동일한 도시 공간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남성보다 더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여성들이 원하는 '안전'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대전시의 안전정책을 여성의 관점으로 분석하여 대전시민 모두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제안

● 연구의 필요성

- 생활공간, 도시 안전에 대한 불안 증가
- 젠더화된 도시 안전에 대한 인식
- 안전한 도시와 일상에 대한 지역 정책 요구

Ⅱ. 연구의 내용

● 도시와 여성안전에 대한 접근

- 안전한 도시에 대한 여성의 요구: 1970년대 북미지역 30여개 도시의 여성운동가들이 시작한 '안전한 밤길 캠페인'에서 시작되어 유럽 및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서 여성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 캐나다 몬티리올에서는 '여성과 도시Femmes et Ville'가 조성되고, 2002년에는 여성안전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몬트리올 헌장(Montreal Declaration)이 발표됨
- 도시 여성을 위한 유럽선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도시에서 여성을 위한 헌장 Charter for Women in the City'을 제안함
- 안전한 도시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국제연합이 도시의 안전확산을 위해 만든 것으로 세계 24개국 77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음

● 도시와 여성안전에 대한 접근

-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 내 정책결정과정이 도시거주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여성을 포함한 모든 도시거주자들이 도시의 교육, 건설, 안전, 문화, 건강, 복지, 교통 등 전 분야의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함
  - 앙리 르페브르는 도시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도시에 대한 권리'라고 보며, 자본과 국가가 갖고 있는 도시의 통제권을 도시거주자에게 이동시켜 도시의 권력관계를 재구성할 것을 주장함
  - 데이비드 하비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함께 나타나는 도시인구의 증가, 도시 외부로 쫓겨나는 빈민층의 증가, 시민적 권리의 박탈 현상과 같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변화시킬 권리로 확장함
  - 에미르 사데르는 자본축적과 계층적 분리를 강화하는 일반적 상황의 도시에서 포용과 정의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진 장소로 도시를 볼 것을 제안함
- 기존의 도시연구가 성별의 구별없이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여성은 도시공간의 독자적 이용자 집단이기 때문에 도시재구조화 과정에서 계급 및 계층과 함께 여성, 젠더가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해야 함
- 특히 최근에는 남성과 생산 중심의 공간단위 관점에서 벗어나 노동력 재생산 중심의 공간단위이자 장소로 도시를 사유할 것에 대한 요구가 많음. 개인들이 매일 일터로 돌아

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노동력 재생산'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주택공급, 교통, 요리와 양육 같은 가사활동, 생물학적 재생산을 포함함. 따라서 성별분업이 고려되지 않은 재생산정치는 도시정책의 실패이며, 노동력 재생산의 실질적 주체인 여성을 도시정치의 주체로 인식해야 함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여성의 권리로써 안전정책**
- **안전 관련 조직 정비**
- **안전 관련 성별분리통계와 연구**
- **안전 관련 조례 재정비**
- **젠더관점의 안전 관련 홍보와 교육의 확대**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점검**
- **성별에 따른 재난 구호물품의 준비**
- **부처별 재난, 안전 업무 협조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서의 역할과 법적 근거 필요**

대전시 입양가족 실태조사 및 가족지원서비스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장 창 수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입양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새로운 부모와 가족이 되는 것으로써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요보호아동을 가정에서 대리 양육하는 제도로 위탁 및 시설보호보다 더 큰 안정감, 영속감, 친밀감, 소속감을 아동에게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필요성

• 국내입양 활성화, 입양아동 삶의 질 증진, 건강한 입양가족 형성을 위해서는 입양사후 가족지원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Ⅱ. 연구의 내용

● 도시와 여성안전에 대한 접근

• 입양 동기를 살펴보면, '친생+입양아동' 가족의 경우는 '자녀를 추가적으로 원해서'라는

응답이 많고,'입양' 가족은 '난임 및 불임 등으로 자녀가 없어서'라는 응답 순임.

- 입양아동 양육시 어려운 점으로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몰라서'가 26.3%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의 정체성 형성 & 뿌리찾기'가 21.1%, '이웃/학교 등의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이 13.2%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입양가족들은 대전광역시가 '입양 후 전문적 서비스 지원'(27.6%), '양육비의 추가지원' (23.7%), 지역사회의 부정적 편견의 인식 전환(22.4%), 입양조례 강화 및 정비(14.5%)에 관심을 가져주길 원하고 있었음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대전시 입양가족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입양의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 체계 필요
- 입양아동 수당의 추가적 지원 검토
- 입양가족 사후지원센터(안) 설치 검토
- 입양가족 자조모임의 지원
- 입양가정의 입양자녀가 늘어갈수록 입양가족의 주거도 협소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입양 자녀 1명을 더 입양할 경우에 전세자금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대전지역 자활사업 생산품 및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책임자 장 창 수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자활사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생산품 및 서비스의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연구의 필요성**

• 이를 위하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Ⅱ. 연구의 내용

●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생산품 전체 만족도, 영역별 만족도 비교

• 가격, 품질, 편리성, 신뢰감 만족도 비교

- 구입의 편리성과 신뢰성
- 서비스의 친절성, 전문성, 비용, 품질, 정확성 등 만족도
-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한 정책제언 모색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문성 제고
- 자활생산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 공동브랜드 및 공동마케팅 추진
- 자활생산품 홍보관 및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 자활사업 박람회 개최
- 돌봄서비스사업의 품질제고 및 역량강화
- 자활기업연합회 구성 및 운영

대전시 성평등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I

연구책임자 주 혜 진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성 격차에 집중하는 기존의 〈지역 성평등 지수〉 지표체계는 남성의 삶을 준거집단으로 한다는 한계와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여성의 견해, 감정, 인식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연구의 필요성

- 대전지역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혹은 행복감과 관련한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기존의 성평등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음

Ⅱ. 연구의 내용

●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행복감에 대한 단순한 남녀 비교는 의미 없음. 여성의 행복은 기초자치구에 따른 동서 격차,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따른 차이가 있음

- 지역사회 봉사활동, 관심 및 타인과의 교류는 여성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건강유지 활동과 여가활동도 중요한 행복 결정 요인임
- 여성의 가사 및 돌봄시간은 남성보다 길고, 일하는 남성에게 가사노동시간은 행복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함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대전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지표 보완

- 주요 위원회의 여성 비율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객관적 지표로 추가될 필요 있음
- 일자리 안정성, 우울감 및 안전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는 주관적 지표로 추가될 필요 있음
- 가사와 돌봄 노동을 분리해 시간을 측정하고 여가생활 향유 비용과 정보 접근 체감도에 대한 측정이 요구됨

대전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 파악 및 사업 발굴

연구책임자 주 혜 진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전시 민선6기 주요 시책 중 하나인 '성 주류화의 성공적 정착과 기초자치단체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을 실현하기 위해 여건을 갖춘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지원함

● 연구의 필요성

• 유성구는 신흥주거지역과 연구단지,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과 구민의 수요를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발굴이 필요함

Ⅱ. 연구의 내용

●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 분석

• 온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과 대단위 신흥 주거단지, 연구개발특구로 구성된

공간적 특성과, 인구증가 및 전문가 인력 집적 등 사회적 특성을 보임

- 구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활환경 및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남. 가족과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과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행정동별 수요 특성을 살펴보면, 신성동은 복지와 돌봄,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 진잠, 구즉동도 여가활동 및 주거 환경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유성구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여성복지시설이 타 구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성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비전 및 전략 과제

- "스.마.트.한 여성친화도시 유성"을 비전으로 제안하며, 슬로건으로는 "유성매직! 유성이 쓰는 성평등 매직(magic)"을 제안함
- 4개의 권역을 구분하여 권역별로 '가족친화환경조성' '지역사회 안전증진' '여성의 경제 · 사회적 참여 확대'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역량 강화'를 전략으로 제안함.
- 별똥별 놀이터를 비롯한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간과 프로그램, 여성 테마 갤러리가 있는 온천관광거리, 여성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힐링을 위한 건강연구소 운영 등을 사업으로 제안함

2016 대전여성가족통계

연구책임자 주 혜 진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양성평등기본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인적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하고 주요 정책 분야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를 분석하고자 함

● 연구의 필요성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시행으로 성별 분리 통계에 대한 활용이 정착되었고, 각종 통계에 대한 성별 분리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임

Ⅱ. 연구의 내용

● 12개 지표 체계에 대한 성별통계와 6대 광역시 간 비교

- 인구,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보건, 복지, 정치와 사회참여, 문화와 정보미디어, 주거와 교통, 환경과 안전, 공동체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자료를 제시함
- 2015년 기준, 전체 인구 성비는 100.1이며, 서구에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가파른 상승세를 볼 때 노후생활에 대한 지원 요구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1.6%이며 실업률은 3.0%로 나타남. 여성 종사자 수가 남성보다 많은 산업분야는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으로 나타남
- 2015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이 6만 8천 여명으로 나타나, 경력단절 여성비율이 56.7%로, 기혼 여성 중 비취업 비율(22.9%)보다 높게 나타남
- 2015년 대전광역시 인사통계에 따르면, 6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30.3%, 5급 이상이 14.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는 38.67%로 상승했음
- 여성의 안전관련 불안감은 남성보다 높았으며, 사회 전반적인 성평등 정도 평가는 남성의 점수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합계출산율과 노령화 지수 등은 6개 광역시 중 양호한 편임. 젊은 도시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 강화가 요구됨**
- **경제활동참가율 및 여성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등 사회 참여 비율 상승에 따른 지표 성과는 6개 광역시 중 우수한 편임**
- **양호한 성별임금격차 및 고용형태를 고려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등 돌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대전시 양성평등정책 현황 및 효과 분석

연구책임자 주 혜 진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전지역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 내용과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17년 시행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과 대전시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점검한 연구는 있었으나, 기본계획의 지역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과 흐름을 파악한 연구는 없었음

Ⅱ. 연구의 내용

● 2013~2017년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사업과 예산 분석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 중에서는 '여성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일자리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남
-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사업이 인과 복지 영역에서 비중이 가장 크며,

돌봄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

- 실과별 추진체계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에서의 추진이 저조하며, 성평등지수 지표 중 '가족관계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들은 확대, 강화되지 못했음
- 세대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 확산이 고려되어야 하며, 일자리와 안전 분야의 거버넌스 활성화가 요구됨
-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교육 사업이 종류도 많아지고 확장되었으나, 전문화를 위한 예산 투입과 성 주류화 제도 간 연계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음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한 대전광역시 시행 계획은 추진 실효성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중단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이행 점검 등은 확산할 것을 제안함**
- **신규 과제로, 성평등 교육 전문가 인력 뱅크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지원 강화, 여성아동지역연대 등 거버넌스 운영의 효율성 강화,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등을 제안함**

4. 문화관광 정책연구

- V 2017 아 · 태도시정상회의 개최 방향 및 경제효과분석
- V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V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발전 방안 연구
- V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 3
  – 정체성 인식에 관한 지역별 사례조사
- V 대전시 SNS 운영효과 분석 및 활성화방안

2017 아·태도시정상회의 개최 방향 및 경제효과분석

연구책임자 문 경 원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전에서 개최되는 2017 아 · 태도시정상회의가 대전지역에 미치는 사회 · 문화 ·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주제 설정, 행사규모, 특화방안을 마련

● 연구의 필요성

• 대전에서 아 · 태도시정상회의와 같은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할 경우,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대응 방안과 이에 대한 전략 제시가 요구됨

Ⅱ. 연구의 내용

●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 2017 아 · 태도시정상회의의 개최는 지역경제에 3천억 원 규모의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여가복지 및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

● **대외적 이미지 향상에 기여**

• 2017 아 · 태도시정상회의는 세계 많은 도시에 회의 개최 소식과 내용이 전달되면서 개최지인 대전시를 알리는 행사로서 그 가치와 의미가 높으며, 대전이 갖고 있는 브랜드를 홍보하고, 각국 도시에 대전 이미지를 알리고 홍보하는 계기 마련

● **관광산업 발전 계기 마련**

• 국제회의 개최기간 동안 외국인의 숙박이 증가하고 숙박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관광관련 분야의 수익이 나타나면서, 재투자 등 관련시설 발전이 예상되며, 전반적 컨벤션 관련시설의 강화가 예상됨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국제회의의 지속적 유치추진으로 도시 위상 강화**

• 국제회의를 비롯한 이벤트의 지속적 유치를 통해 도시 이미지의 향상과 세계 도시로서의 대전시 위상 강화가 필요한 국제회의 규모 확대, 보다 체계화된 국제회의 시설 등을 보완하는 전략 등이 마련

● **MICE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홍보 및 대전마케팅공사 역할 강화**

• 국제회의 도시로서 해외 마케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제기구 및 해외기관들과의 활발한 교류 활동의 진행을 위한 홍보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는 대전마케팅공사의 역할 강화

● **정책적 지원 전략 마련을 통한 국제회의 수용력 확대 필요**

• 국제회의 전담을 위한 체계적 · 독립적 조직 및 기구의 상설 운영, 국제회의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대전의 대표 컨벤션시설인 DCC의 수용력을 확대하여 대규모의 국제회의 및 전시박람회 개최능력 보유가 요구됨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문 경 원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커지면서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뷰티(Beauty)에 대한 소비는 증대되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건강수명 연장에 대한 욕구는 새로운 산업성장 동력으로 대두

● 연구의 필요성

• 뷰티관련 산업의 육성과 발전 중요성을 전제로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뷰티관련 산업의 육성 정책 및 뷰티 관련 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제시

Ⅱ. 연구의 내용

● 대전지역 뷰티사업의 시사점

• 대전은 화장품 제조업보다는 뷰티관련 서비스업인 이용 및 미용업 등에 중점을 두어

대전지역의 뷰티관련 학과와 연계한 산 · 학 · 연 이벤트 및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되어야함

- **대전시 뷰티사업의 활성화 방안**
  - 대전 뷰티사업의 추진 전략으로 뷰티사업과 의료 · 관광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연계, 뷰티관련 업체 및 인력지원 시스템구축, 대전지역 뷰티관련 대학의 연합행사 개최 및 이벤트 개최, 대전뷰티콤플렉스 건립 등 제시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대전지역 뷰티관련 대학의 연합행사 개최**
  - 대전시의 화장품뷰티 관련 산업체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상호협력방안을 구축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 · 학 · 연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개발 필요
- **대전뷰티 콤플렉스 조성**
  - 외국인과 대전의 방문객에게 뷰티를 테마로 한 뷰티 관련 콤플렉스 조성하여 부티 관련 산업의 특성화를 통해 대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이 요구
- **대전 HD드라마 타운 연계 국제 뷰티 행사 기획**
  - 해외 자선헤어쇼, 세계메이커업축제와 같은 프로팀을 주축으로 하는 뷰티 쇼 및 대회 개최, 미디어 메이커업(Media make-up)을 기반으로 하는 특수효과, visual effect make up & hair show를 개최
- **대전 뷰티 재교육 센터 구축**
  - 뷰티 재교육센터 유치를 지원하고, 대전광역시 미용 협회 연계를 통하여 참여 소규모 업체 컨소시엄 구축하여 소규모 업체의 직업 재교육 실시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발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문 경 원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최근 여가시간 증대와 문화 향수에 대한 욕구증대에 의해 문화 가치가 강조됨에 따라 미술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
- 고암미술문화재단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운영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전략 제시

● 연구의 필요성

- 대전고암미술재단에 대한 현재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고, 발전방안을 마련 및 국내의 미술관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 운영과 경영 전략을 마련함

Ⅱ. 연구의 내용

● 입장료 인상 및 현실화

- 현재 500원의 입장료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입장료를 높이고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

● **패키지 상품 마련**

- 대전의 대표적 입장료 방문지인 오-월드와 패키지 관광상품을 마련, 대전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응노미술관의 관람권을 유·무료로 하여 판매하는 개념 및 방식 도입

● **수익사업에 대한 검토**

- 현재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편의시설로는 카페테리아, 아트 숍 등이며, 아트 숍을 활용한 브랜드화로 기념품의 가치화를 통해 자체적 PB상품(private brand products)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

● **편의시설 추가 검토**

- 추가적 편의시설은 미술체험 시설로 아동을 둔 부모에게 목적지 및 방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미술체험 교육을 추가하여 직·간접적으로 미술관 관람을 유도하는 방안 요구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지역문화와 가치향상을 위한 미술관**

- 지역의 커뮤니티 예술프로그램과 지역자치의 예술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대전시 차원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미술관**

- 미술관이 문화를 담당하는 사회적 기능과 문화활동을 예술적 표현수단, 한 집단의 발전이라는 측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지역경제발전과 도시재생정책과 연관된 도구로서의 역할까지 확대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 3
- 정체성 인식에 관한 지역별 사례조사

연구책임자 한 상 헌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신흥도시로서 대전의 장점인 다양성과 역동성을 도시발전의 역량으로 승화하는 것이 필요
- 도시정체성 재정립을 위해 지역정체성의 대표성을 지니는 개별 지역에 거주민의 생각을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사례연구가 요청됨

● 연구의 필요성

- 대전시민은 어떤 정신을 갖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인식(의식)수준에 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지역정체성의 실질적 내용 탐구

Ⅱ. 연구의 내용

- 주민들의 생활경험과 인식에 대한 민속지적 구술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공동체 밀류(milieus) 특성을 살펴봄. 이를 위해 도시 재생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도심' 지역(대흥, 은행, 선화동),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으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제적, 문화적 소외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낙후' 지역(대동, 신인동), 그동안 대전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간주되고 있는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견인하고, 대학 및 연구단지 종사자가 밀집 거주하고 있는 '부도심' 지역(신성, 어은동)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심층 조사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지역의 변천사와 사라져가는 스토리를 발굴하여 기록. 타깃 집단의 선정은 외부에 유입된 인구를 포함해서,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별 · 집단별 특성과 생생한 생활사 스토리를 조사 · 발굴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대흥동과 은행선화동 지역

- 문화와 생활의 중심지였다는 자부심을 기억 속의 정체성으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현재 원도심 공동화를 깊이 느끼면서 이에 대한 박탈감과 정책 불신을 지니고 있음

● 대동과 자양동, 신인동 지역

- 낙후된 빈곤지역으로 낙인된 지역이미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부정은 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체계가 발달하였고 대학 등 학교가 많다는 것에서 잠재된 가능성을 찾음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역 이미지에 대해 지역개발, 주거환경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변화시키려는 열망을 지니고 있음

● 궁동 · 어은동 · 신성동 지역

- 주민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삶에 만족해하면서 과학 특화 지역이라는 특성을 충분히 느끼며, 대전이라는 도시의 정체성도 과학도시로 규정되는 데에 부정하지 않음. 다만 같은 유성이라는 공간 내에서도 구도심이 형성되고 있다는 불안감과, 대전의 발전이 정체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타냄

대전시 SNS 운영효과 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책임자 한 상 헌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영향력 증가에 발맞춰 SNS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대전시민의 행정서비스 이용편의를 돕고 시민과 대전시 지자체간의 상호소통을 높이는 것이 필요
-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SNS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매체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함
-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제정(2016.4)에 따라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이와 연계된 각종 시책 개발이 필요해짐

● 연구의 필요성

- 대전광역시 SNS 운영활성화를 통해 시정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전략 방향으로 참고
- 대전시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SNS 매체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배분과 인력 배정 등 선택과 집중에 참고하는 기준 마련
-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II. 연구의 내용 및 정책제언

● 매체별 전략

- 페이스북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SNS를 통해 대전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함
- 트위터 속성상 팔로워는 팔로잉에 비례하므로 팔로워를 높이기 위해서는 팔로잉을 확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다만 과거 친소관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정보 제공을 위한 도구로 트위터의 쓰임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트위터는 페이스북보다 블로그와 함께 정책을 전파하는 목적으로 연동성을 강화해야 함
- 블로그가 축적하고 있는 정보의 유용성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서비스형 블로그를 디자인 구성이 자유로운 설치형 블로그로 전환하는 것도 과감히 고려해봐야 함
-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인스타그램의 확대에 집중하고, 카카오스토리와 밴드는 급속한 확대보다는 멤버간 결속력을 높이는 것으로 차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통합전략

- 같은 SNS일지라도 매체별로 사용자들의 목적과 사용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매체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전략이 이뤄져야 함
- 외부위탁보다는 궁극적으로 전문인력 채용을 모색해야 하며, 소셜미디어기자의 운영만으로는 대전시 SNS 서비스가 도약하기 어렵고, 부산지방경찰청의 사례와 같은 전문 상근인력의 확보가 필요
-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명확히 인식하여, 일방적 홍보가 아닌, 대전시민의 진정한 자발적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화 전략의 방향이 맞춰져야 함

5. 교통계획 정책연구

Ⅴ 대전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방안

Ⅴ 대전시 대중교통 이용객 증진 방안

Ⅴ 대전시 버스전용차로 기능 활성화 방안

Ⅴ 중앙로 일원 교통 · 보행환경 개선방안

대전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방안

연구책임자 이 범 규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중의 하나로 국내외 적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실정으로 대전시도 대중교통 및 보행활성화, 도시재생 차원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도입방안 모색

● 연구의 필요성

• 대전시도 2008년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2번째로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상인단체의 반발 등으로 중단되어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도입방안 모색 필요

Ⅱ. 연구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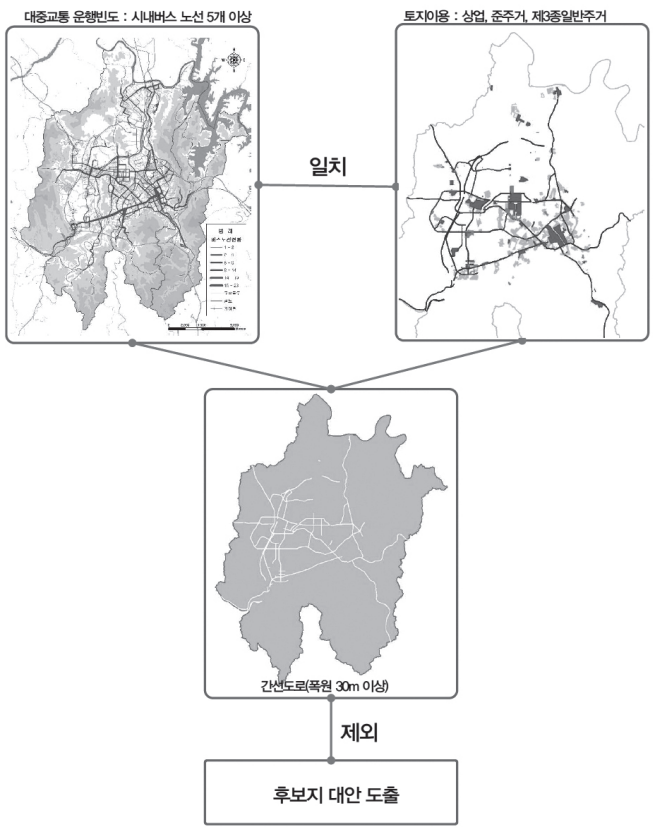
● 대전시 대중교통전용지구 후보지 선정

• 필수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6개 후보지 대안을 도출하고, 부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2개

후보지 선정 / 중앙로 및 계룡로

- (필수적인 요건) 모든 자동차 통행에 꼭 필요한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승용차 진입을 차단하더라도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대중교통 운행빈도가 높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를 입지요건으로 설정함
- (부가적인 요건) 대중전용지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우회도로 확보가 원활한 도로, 주차장 확보 가능 도로, 일정 수준이상의 보행량이 있는 도로, 보행환경 개선 가능 도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가능 도로, 교통혼잡 영향이 적은 도로, 걸어서 쇼핑할 수 있는 소매상가가 밀집된 도로를 입지요건으로 설정함

대중교통전용지구 후보지 대안 도출 과정



●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추진방안

- (중앙로) 중앙로 주변 상가지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재추진을 검토하되, 상인들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된 만큼 상인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원점에서 재추진
- (계룡로) 2019년 유성시외버스터미널이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유성복합터미널로 이전(유동인구 감소로 상가 침체예상)되고, 2019년 계룡로 우회도로 건설이 완료되므로 이 시기를 고려하여 2020년 이후 추진하되,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수행한 후 추진(착수단계부터 상인들과의 협의 필요)

●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방안

- 대중교통전용지구 운행시간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중교통 미운행시간만 제외하고 전일제로 운행
- 운행허용 차량은 시내버스(마을버스 포함), 3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택시, 조업차량(허용시간에만 진입가능), 긴급자동차(소방차, 응급차 등), 허가차량(통행증 발급 차량)으로 설정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대전시는 승용차에 비해 대중교통 경쟁력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이로 인해 승용차 위주의 고비용 교통구조를 보이고 있음
-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통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대중교통전용지구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쇠퇴된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국내외 사례를 볼 때 적절히 도입할 경우 큰 효과도 거둘 수 있으므로 성공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대전시 대중교통 이용객 증진 방안

연구책임자 이 정 범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전시는 현재 91개의 노선버스와 2006년 개통된 도시철도 1호선이 있음
- 도시철도는 정시성, 쾌적성, 편의성과 함께 친환경교통수단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음
- 그러나, 단일노선의 도시철도로는 대전 시민을 효율적으로 수송하는데 한계가 있고 버스와의 유기적인 환승체계를 만드는데도 어려운 현실임

● 연구의 필요성

-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여건에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 승용차 이용객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고 버스의 경우 배차간격을 최소화하여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수단간 환승체계를 용이하게 하여 승용차 이용객이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함

II. 연구의 내용

● 마을버스 서비스에 따른 이용객 분석

- 도시철도 1호선의 이용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한 대중교통 수단인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가까운 도시철도 역사까지 수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중교통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신도시 지역에 마을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 승용차에서 도시철도로 수단전환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요를 2015, 2020, 2025년에 대하여 각각 분석함
  - 신도시의 경우 버스노선이 부족하고 인근 도시철도역까지의 거리가 멀어 승용차 이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5년 도시철도역 인근 이용객이 도시철도역 인근의 목적지로 이동하는 경우의 '도시철도 이용률'은 8.8%이며, 2020년은 8.5%, 2025년은 8.4%로 예상됨
  - 도시철도역과 신도시 지역 간의 접근성을 개선하였을 때 예상되는 잠정적 도시철도 이용 증가량을 도시철도 이용률에 포함시키면, 대전시 전체 도시철도 이용률은 2015년, 2020년, 2025년 모두 약 0.3% 정도 증가된 3.2%, 3.1%, 3.0%일 것으로 추정됨(도보포함)

● 버스승강장 위치조정 필요

-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버스와 도시철도간 환승거리를 줄여야 함
  - 일부 정류장의 경우 환승을 위한 보행거리가 300m이상으로 길어 접근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버스정류장 위치를 조정하고 버스의 배차간격, 운행시간 등의 조정 필요

III.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도시철도 1호선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한 실정임
- 현재의 여건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의 개선과 더불어

좀 더 유연한 대중교통 수단인 마을버스를 증설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마을버스는 유성구에 3개의 노선이 있으나 배차간격과 노선길이가 길어 시내버스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인승 이하의 소형버스를 마을버스로 도입하고 노선길이와 배차간격을 최소화하여 도시철도 이용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마을버스 운영관리에 대한 재정립 필요

- 마을버스는 유성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내버스는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음
- 원활한 마을버스 운영을 위해서는 시내버스와의 노선 중복문제와 보조금 문제 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통합운영 할 필요가 있음
- 마을버스를 도시철도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도시철도역과 인근 주거지역을 탄력적으로 연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정류장의 경우 버스정류장과 도시철도 역사의 보행거리가 길어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반석역, 월평역, 등의 버스정류장 위치를 역사 입구 인근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접근성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대전시 버스전용차로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이 정 범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전시는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승용차의 혼잡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음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택시 및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시간당 운행하는 버스의 수가 적어 일부 구간에 대해 전용차로 운영에 대한 폐지민원이 있는 실정임
  - 오정동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공구상가 앞의 주차문제와 더불어 교통소통 및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연구의 필요성

- 버스전용차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II. 연구의 내용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분석결과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도입이 비교적 용이하나 택시 승하차, 불법주정차 등의 차량으로 인해 버스전용도로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단속건수에 비해 집행률은 30% 정도(서구: 2015년 기준 39.65%)밖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좀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임

● 중앙버스전용차로 분석결과

• 대전시–세종시 구간 천변도시고속화 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만들어졌을 경우 차선 감소로 인한 일반 차로의 교통상황을 분석함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각 항목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평균속도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후 76.7km/h에서 65.1km/h로 감소함

–차량당 평균지체는 29.4초에서 59.3초로 약 30초 정도 늘어남

–전체지체시간은 68.9시간에서 140.5시간으로 크게 늘어남

–전체통행시간은 807.7시간에서 889.4시간으로 늘어남

III.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승용차의 이용 억제와 도로의 속도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대중교통으로의 수요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버스전용차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효과적 단속을 위한 단속 방안이 필요함

- 이동식 단속차량 및 eagle eye를 장착한 버스의 수를 늘려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 통지가 오지 않으면 운전자로 하여금 위반에 대해 무감각해 질 수 있으므로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집행이 필요함
- 단속된 차량에 대한 집행비율을 최소 50%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 톨게이트 비용 문제로 원촌교를 통과해서 진출입하는 차량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장래 교통 수요관리를 위해 원촌교 진출입부에 톨게이트 설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진출입 1,780대, 진입 1,023대로 나타남(18:00~19:00 기준))

• 또한, 장래 회덕IC가 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연결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중앙로 일원 교통·보행환경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이 정 범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전시는 2015년부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걷고 보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실시하고 있음

– 구)충남도청부터 대전역까지 1.1km 구간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함

● 연구의 필요성

• 이와 같이 걷기 좋은 도시 대전을 구현하기 위해 중앙로 일원 구도심의 교통, 보행, 주차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특히, 중앙로 일원의 경우 교통혼잡, 불법주정차 등의 이유로 교통환경 및 보행환경이 열악한 상황임

Ⅱ. 연구의 내용

● 보행환경

• 보행단절구간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함
  – 최근 보행권이 중요해 지면서 주요 교차로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긴 가로구간에도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자유로이 횡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구)충남도청 앞 교차로와 중앙로역 네거리에는 적절한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가 지하보도를 이용하거나 먼 거리를 돌아서 횡단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열악한 보도 포장상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를 위한 연석높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 교통환경

• 구)충남도청 앞 교차로는 비정형식 교차로로 교차각이 직각이 아니고 구)충남도청 출입구로 인하여 한 개의 교차로에 두 개의 신호가 운영되는 형태로 되어있음
  – 구)충남도청 입구로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별도의 신호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충에 의한 사고 위험이 있음
  – 비록 현재의 신호운영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사고가 나지는 않지만 비정형 교차로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개선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교통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좀 더 나은 교차로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음
  – 현재의 교통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에서 조사된 교통량을 바탕으로 현황을 분석함
  – 또한, 구)충남도청 입구를 막고 4현시의 4지교차로로 운영하였을 경우에 대해 분석함
  –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을 경우와 중앙로 일원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하여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함

• 분석결과, 신호 및 통행제한을 통한 개선을 하였을 경우 차량당 평균지체가 146.096초(현황 242.699초)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회전교차로의 경우 현황보다는 지체 및 통행속도 개선되었으나, 신호 및 통행제한을 통한 개선과 유사한 지체가 발생함. 즉, 현재의 교통량을 회전교차로로 개선하기에는 교통량이 용량초과인 것으로 판단됨
  – 회전 교차로와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활용한 경우, 일반차량의 접근이 제한되는 효과로 인해 교차로 전체의 평균지체(4.677~4.708초)는 매우 양호함

● 주차환경

-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이 필요함
  - 주차에는 공짜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상시 단속을 하여 불법주정차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함
  - 주차단속 어플을 홍보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ITS와 연계한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정보를 알 수 있는 주차안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조업주차 시간 지정에 따른 불법주정차 문제 개선
  - 특정시간(새벽 및 야간)에만 조업주차를 허용하여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
  - 조업주차를 위해 차로 중간에 대기공간 마련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보행동선이 단절된 구)충남도청 앞 교차로와 중앙로역 네거리에는 적절한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지하도를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교통약자는 보행동선이 길어지면 무단횡단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 시설물 개선이 필요함
- 중앙로 인근 가로구간에도 횡단이 원활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이면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고 차로폭을 줄여 불법주정차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보도상의 가로수, 자전거 정류소 등의 시설을 이설하여 보행로를 확장해 줄 필요가 있음 / 필요에 따라 가로수를 제거하는 방안도 고려
- 고령자를 위해 연석높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 구)충남도청 앞 네거리의 경우 교차로의 기하구조와 인근 도로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4현시의 교차로로 운영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 시민의식 개선을 통하여 주차에는 공짜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상시 단속을 통하여 불법주정차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함

• 주민 참여에 따른 주차관리 방안 마련 필요(주차 거버넌스)
  – 주변상인 및 인근 주민의 협조 없이는 주차정책이 성공할 수 없음
  – 시민이 함께 주차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상인회와 연계한 불법주정차 단속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법주정차의 시간 및 구간을 설정하고 구와 시에서는 설정된 지역에 대해 철저한 단속업무 수행

6. 도시계획 정책연구

- Ⅴ 해제된 정비구역과 낙후지역의 주민맞춤형 공모사업 평가기준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Ⅴ 대덕테크노밸리 내 커뮤니티센터 활용방안 연구
- Ⅴ 대전시 도시관리계획 체계 내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Ⅴ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연구
- Ⅴ 대전광역시 자동심장충격기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Ⅴ 대전시 용도지구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연구
- Ⅴ 대전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발전방안 연구
- Ⅴ 대전 도안 3단계 도시관리방안 연구
- Ⅴ 대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방안 검토 연구
- Ⅴ 공유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 Ⅴ 대전의료원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 Ⅴ 대전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 연구
- Ⅴ 대전광역시 주거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지표 예측에 관한 연구

해제된 정비구역과 낙후지역의 주민맞춤형 공모사업 평가기준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염 인 섭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전시가 2016년도부터 주민공모사업 형태로 추진예정인 '소규모 주거정비사업[1]'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 차원의 공공지원 영역(주택 재건축 관련 컨설팅 및 설계지원, 대출금리 우대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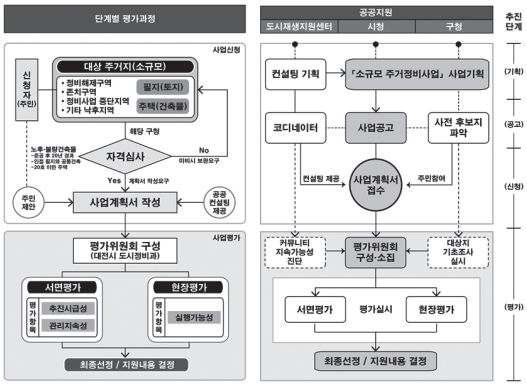
● 연구의 필요성

- 2015년 이후 대전시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약 3.5㎢)을 비롯한 낙후지역 내 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가칭 대전형「모둠주택」)' 추진을 위한 평가체계 필요

1)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2015.9); 노후불량주택 또는 밀집지역을 20세대 미만으로 재건축하고, 원 거주자가 재정착하여 주차장, 텃밭 등을 공유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보전·발전시키는 형태의 주거정비사업; (가칭) 대전형「모둠주택」– 2016년도부터 공공지원 예정(주택 재건축 기술 및 설계지원 20동)

II. 연구의 내용

● 주거정비 패러다임을 고려한 소규모 주거정비 활성화 평가기준 제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과정 및 공공지원 절차(최종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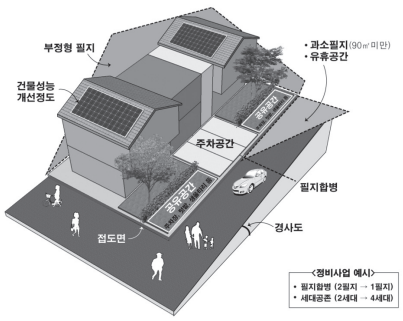
- 관리지속성 : 주민주도의 지속적 주택개량과 주거지 관리능력 평가
  - 주거환경 및 지역공동체 차원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지표로 구성(서면평가)
- 추진시급성 : 주거환경 개선 필요도 및 주택의 결핍지수 평가
  - 필지 및 건축물 단위 주거정비 개선정도를 정량적 평가지표로 구성(서면평가)
- 실행가능성 : 주민을 위한 주거정비와 주택 개량 사업추진의 용이성 평가
  - 주택정비 추진과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로 구성(현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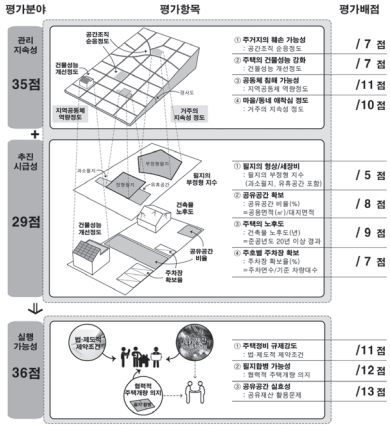
● 상대적 중요도에 기초한 평가분야별/평가항목별 가중치 도출

- 평가분야 세부항목별 가중치에 기초한 배점기준 제시
  - 실행가능성(36점) 〉 관리지속성(35점) 〉 추진시급성(29점)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필지규모에 따른 사업유형(단일 필지형, 소규모 필지형, 중규모 필지형)과 정비방식에 따른 사업 특성(개별정비형, 세대공급형)을 구분하여 평가지표 적용방안을 정리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평가항목

대덕테크노밸리 내 커뮤니티센터 활용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염 인 섭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전 도시관리계획(대덕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기존 용산중학교 부지와 폐기물처리장 부지가 폐지되어 대덕테크노밸리지구 내 추가로 지정된 커뮤니티센터 부지(CNT2, CNT3) 2개소의 활용방안을 모색

● 연구의 필요성

- 대상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상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구역으로 지역공동체(지역주민, 입주기업인 등)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기능 · 시설 및 프로그램이 제안될 필요가 있음

Ⅱ. 연구의 내용

● 활용의 기본구상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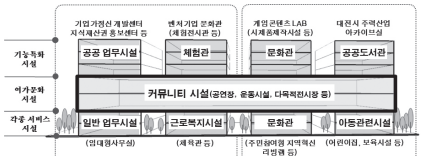
- 사용자 니즈(needs; 공간적/경제적/사회적)에 기초한 기능 · 시설 도입

• 지역사회 중심형 시민참여 혁신활동 공간 및 과학문화 기반 구축

● **커뮤니티센터 부지별 활용방안 모색**

• CNT2부지 활용방안 구상(안)CNT2 부지 :
주민과 입주기업인 간 교류 활성화에 초점
– 기존에 학교시설 용지였던 점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을 위해 교육기능에 특화된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복지시설 등을 제안

• CNT3 부지 :
입주기업인 근로복지 서비스 공간 조성
–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공급에 초점을 두어 소규모 복합 또는 단독개발을 통한 독립된 시설 공급



CNT2부지 활용방안 구상(안)

매스 구상 (안)			
건폐율	69.2%(2,291㎡)	69.8%(2,310㎡)	68.1%(2,250㎡)
용적률	346%(11,455㎡)	349%(11,550㎡)	317.6%(10,500㎡)
매스 구상 (안)			
건폐율	65.8%(2,175㎡)	69.8%(2,310㎡)	기준건폐율: 70%(2,314.2㎡)
용적률	297.25(9,825㎡)	349%(11,550㎡)	기준용적률: 350%(11,571.0㎡)

CNT3부지의 개발규모 구상(안)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대상 부지는 주민과 입주업체 간 상호 교류활동 강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차원에서 공공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 부지 내 잉여공간에 대해서는 각종 국책사업 유치, 매각(용도전환, 민간임대 등)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커뮤니티센터 부지들 간 상호 공간적 · 기능적 위계는 지구단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

• CNT1 부지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주민복지시설, CNT3 부지는 공업지역에 위치한 근로복지시설, CNT2 부지는 CNT1과 CNT3의 중간지역에 위치하여 주민과 기업인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공급함으로써 시설 간 기능 중복성 방지 가능

대전시 도시관리계획 체계 내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염 인 섭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전시의 현행 도시계획 여건을 고려하여『건축자산 진흥구역』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비교 · 분석, 관련 사례비교, 법제도적 여건 분석 등을 통해 대전형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을 지원하기 위함

● 연구의 필요성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4.6.3.)이 2015년 6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방안이 요구

Ⅱ. 연구의 내용

● 대전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체계(안) 제시

• 건축자산의 유기적 순응을 위한 관리체계 : 영역성과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접근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역단위 종합 관리체계 : 민관협력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관리와 종합 관리체계 구축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적용가능성 진단 및 평가체계 제시**

• 지역차원의 평가기준 활용
  – 건축자산 보존/활용 단계별 평가, 구역지정의 타당성 평가
  – 장소브랜딩 평가(스토리텔링, 지속가능성, 상징이미지, 경쟁력)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건축자산을 둘러싼 입체적 영향권역 설정이 매우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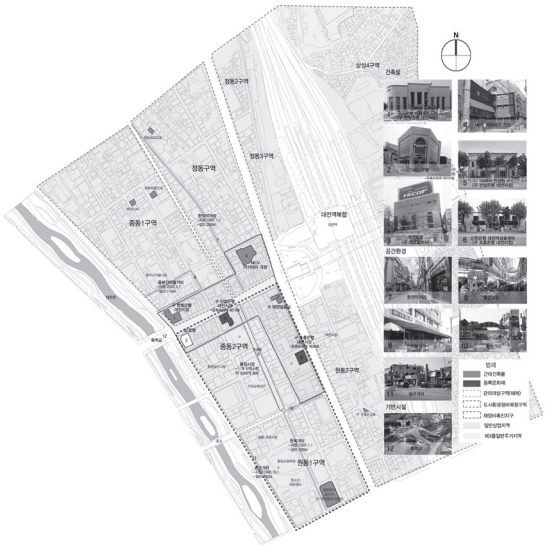
• 토지용도별 영향권 범위 차별화 및 상위 도시계획과 연계성 강화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건축자산 보전 · 활용 지침 마련이 중요**

• 지역주민에 의한 자발적 구역지정 · 관리 활성화(주민협정 등)

• 건축자산 가치 인식 ·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과 관련 사업 간 연계

• 건축자산 진흥구역 시범구역 선정 등 제도적 지원 강화



대전시 원도심 지역 문화적 특성에 기초한 근대 건축물 관리권역 설정 예시(시범사업)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이 형 복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대전광역시에서 기존에 추진된 사업의 유형 이해를 통한 대전광역시의 공공디자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행정의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5개 자치구에서 제안한 시범사업을 검토함

● 연구의 필요성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게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만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과 시범사업에 관한 연구가 필요

Ⅱ. 연구의 내용

● 공공디자인 관련 개념 정립

- 공공디자인의 정의 및 유사한 용어(도시디자인, 도시경관디자인, 마을만들기)에 대한

개념을 정리 및 비교함

-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리하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검토함

● **공공디자인 관련사업 현황 및 사례 분석**

-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최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함
- 사례연구를 통해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정책방향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방향 수립**

- 대전광역시의 공공디자인 정책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의 실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함
  – 공공디자인의 영역확대, 영역의 명확화, 실행체계의 고도화 등

●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구상**

- 5개 자치구별 시범사업 대상지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지 2곳(유성구 구즉묵마을, 중구 보문산 비나리길)을 선정함
  – 전문가 파견을 통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함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전략적 유형 체계 확립 필요**

- 사업성과 도출이 가능한 사업유형을 전략적으로 모색해야 함

● **시범사업에 대한 명확한 관리부서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관리체계 개선 및 조직 시스템 정비 필요

●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유연한 연계체계의 확립과 이해과정 필요**

대전광역시 자동심장충격기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이 형 복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전광역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적시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의 효율적인 정책 활용방안 모색

● 연구의 필요성

•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 각종 스트레스 증가로 인하여 심정지 질환의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매우 낮은 소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

Ⅱ. 연구의 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법률 및 현황

•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으며, 최근 자동심장충격기로의 명칭변경, 의무설치시설의 불이행 시 과태료 등 개정이 이루어짐

- 대전시의 자동심장충격기 1대당 인구는 약 8,877명으로 부산, 울산과 더불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자치구별 현황에서는 서구가 가장 높은 설치대수를 나타냄

● 자동심장충격기의 문제점

- 자동심장충격기는 현재 설치 또는 공급, 유지관리,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대전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법률상 의무설치대상의 범위, 설치 기준이 미흡하여 공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자동심장충격기 등록대수와 실제 대수의 차이, 배터리 수명 및 고장 유무레 대한 주기적인 관리체계 미흡 등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실정임
  -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며, 이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이 부족하여 실제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음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심장이 강한 대전만들기'를 위한 선제적 예방중심의 3대 전략 및 9개 추진시책 제안

- 자동심장충격기의 효율적 공급, 체계적 유지관리, 효과적 교육 및 홍보를 위한 9개 시책을 제안하고 전략적 로드맵 마련
-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세미나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인식확산
-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법개정을 지속추진하고,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 마련

대전시 용도지구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임 병 호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전시 용도지구 운용실태를 조사 ·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전시 여건에 맞는 용도지구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필요성

- 대전시는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와 유사하게 용도지구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이 제도가 용도지역제도를 보완하고 도시의 실제적 관리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임

Ⅱ. 연구의 내용

● 대전시 용도지구제도 운용의 기본적 방향

- 대전시 용도지구제도 운용의 기본적 방향을 소극적인 운용체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운용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설정

- 제도적 보안방안으로 용도지구의 통합운영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다음으로 지구지정 기준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음

● **대전시 용도지구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 첫째, 용도지구 지정 시 개별계획과 연동 : 다양한 용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보다 개별적으로 충분히 논의된 개별계획을 바탕으로 지구를 지정함이 바람직함
- 둘째, 용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 : 용도지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용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셋째, 지구지정 이후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용도지구가 사회적 여건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넷째, 대전시 여건을 반영한 지구유형 지정 등의 방안 제안 : 리모델링지구, 도시재생지구, 단독주택지구 등 제안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용도지구제도가 기존 용도지역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제도)이라는 점에 착안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용도지구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일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용도지구제도가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대전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발전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임 병 호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2009년부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대전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연구의 필요성

• 대전시에서는 2016년 기준 8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2020년과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이 지구별로 수립되어 일부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원활한 추진을 보이고 있으나, 다수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그 추진이 미진한 상태임

Ⅱ. 연구의 내용

● 대전시 재정비촉진사업의 과제 및 대응방향

• 과제 : '사업의 실현성 향상'과 '해제 지구나 구역의 관리방안 마련' 2가지로 설정

• 대응방향 : 사업의 실현성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 등 다각적 사업 연동추진', 해제

재정비촉진지구나 재정비촉진구역의 관리방안으로는 '주민의 의지에 기초한 자발적 주거환경 개선 유도'로 설정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단계별 추진방안**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신규 지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 적극 수렴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단계에서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균형발전의 성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기반시설 사업비의 합리적인 환수 및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될 경우, 주민자발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주거환경 관리사업 등) 마련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대전시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된 이후 10여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점검의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향후에는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연동추진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대전 도안 3단계 도시관리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임 병 호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2018년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적절한 관리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대전시 도안 3단계 지역에 대한 향후 합리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의 필요성

• 대전시 도안 3단계 지역은 2016년 기준 시점에서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2018년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임

Ⅱ. 연구의 내용

● 도안 3단계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첫째, 도안 3단계 도시개발 차별화 전략으로 에너지 절약형 도시인「에너지 제로 City」로 조성

- 둘째, 도안 3단계 지역은 4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4개 블록 전체를 포함하는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함이 타당함
- 셋째, 대전교도소 부지의 경우 도안 3단계 계획 및 개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지이므로, 교도소 이전 및 일부 이전 그리고 존치 등 다양한 대안을 심도 있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기반시설 설치방안으로 대전 서부지역 차원에서는 노은지역에서 도안 신도시로 연결되는 순환도로망, 도안 신도시 차원에서는 도안대로 건설, 도안 2단계 내 동서대로 확장 그리고 도안 3단계 내 동서방향 도로망 구축 등이 필요함
- 다섯째, 개발블록은 지역의 여건(과제)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블록설정이 필요하며, 기시가화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다양한 여건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도안 3단계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도안 3단계 지역에 대한 계획 및 관리는 우선적으로 「(가칭) 대전시 도시관리 전략」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도안 3단계 지역을 포함한 도안신도시 개발은 '원도심과의 상생 및 균형발전'이라는 기본적 가치에 부합하여 추진되어야함

대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방안 검토 연구

연구책임자 임 병 호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최근 대전시의 사회적 ·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용계스포츠타운 조성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향후 추진방안(방향) 제안코자 함

● 연구의 필요성

• 2005년 대전시에서는 체육관련 메가이벤트를 위해 용계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용계스포츠타운 조성여건을 검토 및 그 추진방안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Ⅱ. 연구의 내용

● 추진전략 및 접근방안

• 추진전략은 생활체육시설 패러다임에 부응(시설이용측면)하며, 수요 대응형으로 전환(시설관리 측면)한다는 2가지 전략 수립

- 접근방안은 현상태 추진, 수정 추진 그리고 대체시설 입지 등 3가지로 제안

● **접근방안별 장단점**

- 대안 Ⅰ의 경우,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국제대회 유치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합리적 수요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함
- 대안 Ⅲ의 경우 용계스포츠타운 부지에 새로운 도시활력기능을 입지시키면서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이며, 이 대안의 경우 기존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있음
- 대안 Ⅱ는 대안 Ⅰ과 Ⅲ의 절충적 접근방안으로, 적절한 시설과 규모의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임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용계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3가지 추진방안 중 하나의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각 방안별로 지역발전효과와 유지관리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 **용계스포츠타운 조성 시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첫째, 용계스포츠타운 조성은 대전시 및 주변지역의 여건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
- 둘째, 현상태로 추진하거나 수정보완하여 추진하거나 건설사업비와 함께 유지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현상태로 추진하거나 수정추진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건설 및 유지방안이 모색되는 타당성 검토연구가 필요함

공유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책임자 정 경 석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전시 공유네트워크 사업이 행정 및 민간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다양한 시민활동과 경제활동을 유도해 내는 등 사회혁신 활동을 통한 도시공동체 회복에 훌륭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전시의 공유네트워크 사업이 좀더 활성화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연구의 필요성

-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공유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향후 공유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Ⅱ. 연구의 내용

● 공유도시 추진 사례 지역 문헌 검토 및 사례 조사

● 공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 실시

● **대전시 공유시책 사업에 대한 중간 이행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정책적인 개선 방안 도출**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공유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 필요**

● **공유활성화 지원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선정 기준 및 지원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
- 공동체사업 내지 사회문제 해결형의 혁신사업으로 지원할 것인지, 대안적 경제모델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

● **공유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획단 운영**

- 교통, 문화, 관광, 세무, 보험 등 공유 활동과 충돌되는 영역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정기적인 논의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공유촉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내지 별도의 「공유네트워크 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애로사항 및 의견 등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의 확보가 필요함

● **민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 규정**

- 지역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들에 의한 상향식 방식의 법 · 제도 정비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규제완화책 등을 선별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들이 공유플랫폼 구축과 사업화 전략에 적시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행정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 및 공유

● **공유 관련 박람회 및 컨퍼런스, 찾아가는 배달 공유마당 등 운영**

- **공유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조성 및 운영**
  - 크라우드 펀딩의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벤처기업 및 아이디어 지원 등 경제적 사업 참여뿐만 아니라 공공가치를 위한 참여(기부, 후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대전의료원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연구책임자 정 경 석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부지의 적정성, 도입시설 및 기능, 적정 규모의 산정, 경제적 · 정책적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코자 함

● 연구의 필요성

• 대전의료원 건립에 따른 사업 효과 내지 구체적인 입지 및 규모 등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실증적이며 객관적인 자료 및 논거 제시는 미흡

Ⅱ. 연구의 내용

● 의료이용 및 공급 현황

• (의료급여자) 전국 평균 2.8%보다 많은 3.0%(46,561명)

•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1개소, 종합병원 8개소를 포함하여, 병원급 이상은 52개소로, 인구 만 명당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수는 특광역시 평균 보다 적음(전국 0.43개소/특광

역시 0.48개소/대전 0.34개소)

- (의사수) 병원급 이상 의사수는 2,205명으로, 인구 만 명당 병원급 이상 의사수는 특광역시 평균 보다 적음(전국 11.81명/특광역시 15.45명/대전 14.41명)
- (병상수) 병원급 이상 병상수는 8,653개로, 인구 만 명당 병원급 이상 병상수는 특광역시 평균 보다 적음(전국 60.12개/특광역시 65.73개/대전 56.56개)

  * 대전 동구의 경우 병원급 이상 병상수는 347개(대전 전체의 4.0%)로 가장 취약

● **진료권 및 병상 규모**

- 진료권 분석 결과, 주 진료권은 대전 5개구, 계룡시, 금산군 등이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진료권은 영동군, 공주시, 세종시, 옥천군, 논산시, 보은군 등이 속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병상수요 추정 결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병상수는 1,083병상으로 분석됨

● **건축계획 및 배치**

- 병원종류 : 종합병원 (병원지위 : 지방의료원)
- 병원부지 : 대전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 일대
- 병원규모 : 부지면적 :39,163㎡(약 11,868평), 연면적 : 30130㎡(9,114평)
- 진료과목 : 15개 과목

● **총사업비 및 사회적 편익 추정**

- 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는 약 1,364억원으로 추정됨
- 대전의료원 설립에 따른 총 사회적 편익은 연간 168억 3,940만원으로 추정됨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경제성 분석

- 경제적 비용의 현재가치는 1,179억1천6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편익의 현재가치는 1,511억5천8백만원으로 추정되어 편익/비용 비율은 약 1.29로 산정되어 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됨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약 0.12%로 양호(세종충남대 병원 0.01, 마산의료원 0.027)
- 총사업비 1,364억원은 대전시 연평균 예산(4조 9,637억원)의 3%로 문제없음

대전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지 남 석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동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도시재생과 공동체 활성화를 연계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마을공동체 기반의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모색함

● 연구의 필요성

• 도시재생은 종합적 도시부흥 전략으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재생 효과를 제고토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Ⅱ. 연구의 내용

● 대전시 마을공동체 활동 특성

• 연차 및 단계가 진행될수록 사업참여 주민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으나, 일부 다년도 지원사업의 활동 지속성이 불투명함

● **대전시 마을공동체 지원 특성**

• 사업유형별로 전담 지원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체 구성부터 네트워크 구축까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시도함

● **대전 공동체사업의 도시재생요소**

• 공동체 구성 및 활동 강화를 위한 다수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물리적 활동기반을 다루는 환경재생 항목은 한정적으로 적용됨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지원영역별 활성화 종합**

• 마을공동체 형성단계(비 참여 → 형식적 참여 → 실질적 참여)에 따라 적정 지원시기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방안**

•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 개편: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공동체 지원역할을 총괄·관리하는 조직 구성을 검토함

• 대전시 통합 마을공동체 현황자료 구축: 공동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총괄조직 중심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대전시 우수사례 공유: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하고, 관련자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함

• 장기적 지원플랜 마련: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재생사업 특성을 고려한다면 단기간(1년) 지원방식은 지양되어야 함

• 지원방식 다양화: 지정공모-자율공모 방식의 배분으로 사업추진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 사업화를 이끌어 내도록 함

대전광역시 주거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지표 예측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지 남 석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전시 인구 및 가구 변화, 주택수요 및 공급 변화 등을 토대로 '2020 대전광역시 주택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지표 적절성을 검토하고, 대전시 여건을 반영한 수정 지표를 논의함

● 연구의 필요성

• 대전시 인구 · 가구 및 대내외적 사회여건 변화로 주택수급의 변화요인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주택정책 조정 필요성이 증가함

Ⅱ. 연구의 내용

● 대전시 주택보급률 변화와 원인

• 대전시 주택보급률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11년 102.6%를 정점으로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임(2015년 주택보급률 102.2%)

- 지속적인 주택공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보급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1 · 2인 소형 가구 급증'임

● **대전시 주택지표 추정**

- 현재의 인구 및 가구 변화 추이와 주택공급 여건을 고려할 때, 2020년 대전시 주택보급률은 99.4%~104.5% 범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주택 양적지표는 향후 인구 및 가구 변화, 주택공급 및 멸실 추이, 그리고 세종시 등 주변 주택시장 변화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 지표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2020년 목표치는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주택지표 관리 및 활용**

- 지속적인 지표 관리 및 축적: 대전시 주택지표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특히 질적 영역과 주거복지 관련지표 비중을 높여야 함
- 주택보급률 활용방식 전환: 인구 및 사회 여건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이 전환되어야 하며, 주택의 배분 또는 질적 개선에 주력해야 함

● **주택 관리 및 공급방향**

- 균형개발을 고려한 정책 추진: '양질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이 적절하게 추진되어야 함
- 주거수요 다변화 정책 추진: 1 · 2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주거복지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야 함

7. 생태환경 정책연구

- Ⅴ 대전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폐기물재활용방안 기초연구
- Ⅴ 대전시 서식 미호종개 분포 및 복원 방안 연구
- Ⅴ 대전시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
- Ⅴ 대전시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 Ⅴ 대전광역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 Ⅴ 갑천유역의 배출부하량 적정화 방안
- Ⅴ 환경재난형 폭염에 관한 연구
- Ⅴ 대전시 환경재해 재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 Ⅴ 반려동물 관련 환경여건 및 산업활성화 기초연구

대전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폐기물재활용방안 기초연구

연구책임자 문 충 만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에 따라 환경자원사업소 및 환경에너지사업소의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과 성상 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분석

● 연구의 필요성

- 대전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목표 이행을 위해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에 따른 폐기물 처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필요

Ⅱ. 연구의 내용

● 대전시 온실가스 배출건거래제

- 대전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 환경사업장은 총 11개로 이 중 폐기물 처리 분야는 금고동자원환경사업소,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음식물쓰레기광역자원화 시설이 있음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은 대전시

할당량의 약 60%로 매우 높으며 할당된 배출권 중 90%이상이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공정배출에 의해 발생됨

-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는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10만 톤/년으로 이 중 고형연료 반출은 5만 톤/년, 반출이외에 금속 및 비금속으로의 선별효율은 60%(3만 톤/년), 협잡물 발생은 2만 톤/년으로 가정하여 산정
    - 온실가스 배출량은 환경에너지사업소에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100% 감소할 경우 10년간 총 배출량이 507,942 t-CO2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환경자원사업소가 100% 감소할 경우는 총 배출량이 1,114,012 t-CO2로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음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여러 정책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의 조성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소각이외에는 매립 일원화였던 폐기물 처리 방식의 전환과 매립장 매립연한 증대 효과가 기대됨
  - 하지만, 환경자원사업소보다는 환경에너지사업소의 생활폐기물 반입의 감소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되어 이에 대한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대전시 서식 미호종개 분포 및 복원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 은 재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대전 내 미호종개 분포 및 생태적 특성 파악을 통한 보전 · 복원 방안 마련

● 연구의 필요성

• 미호종개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오직 금강수계에만 서식하며 환경부지정 멸종 위기 야생생물 I 급 대상종이며, 천연기념물 제454호로 지정되어 있는 법정보호종임

• 대전에서는 갑천에만 서식하며 갑천은 도심지가 점차 확대되어 하천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하상 공사 등으로 인하여 미호종개의 서식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미호종개 보존 대책 마련이 시급함

Ⅱ. 연구의 내용

● 미호종개 분포 현황

• 미호종개는 대전에서 1986년부터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1990년까지 갑천 상류 수역

부터 서구 원촌동 일대까지 서식하였고 금강 본류구간에서도 확인되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만년교와 도안동 돌다리 등 2개 지점에서만 서식이 확인됨

- **미호종개의 생태학적 특성**
  - 미호종개 서식지점에서의 저질을 분석한 결과 모래입자가 0.6mm 이하의 고운 모래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섭식생태를 파악한 결과 규조류(Cymbella spp.)와 일부 수서곤충을 섭식하는 것으로 파악됨
  - 산란은 6~9월말에 실시하여 평균 2,750개의 알을 포란하는 것으로 파악됨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시급한 개체군 보강, 월평공원 인근 하천의 보 철거, 외래종 큰입배스의 지속적인 제거활동 실시, 구간별 차별화된 보전 및 관리방안 구상 등 제안**
- **중장기 추진전략**
  - 미호종개 정밀 모니터링 및 변화양상 파악, 갑천 미호종개 복원사업 추진, 외래어종 현황 파악 및 퇴치 낚시행사 개최, 미호종개 교육 및 홍보 · 활용, 미호종개 서식 갑천 구간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갑천 습지 센터 건립 등 건의
  - 총 7개 사업에 대해 '16년~'20년(5년) 간 총 3억 4,600만원 소요 예상

대전시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립

연구책임자 이 은 재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야생생물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
- **연구의 필요성**
  -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별 시도계획 수립

Ⅱ. 연구의 내용

- **계획의 비전과 목표**
  - 비전으로 '시민의 안전과 야생생물의 서식이 보장된 도시, 대전 '으로 설정
  - 정책목표를 '야생생물과 시민의 효율적 공생'으로 설정
- **추진 전략 및 세부과제(6개 추진전략, 28개 세부과제)**
  - 야생생물 종 및 서식지 조사체계 확립

– 자연환경조사 통합 수행, 정밀 비오톱지도 구축 등 4개 세부과제 제시

• 야생생물 종 및 서식지 보전 · 복원 사업 추진

– 보전 · 복원 대상종 선정, 주요종 복원 사업 추진 등 4개 세부과제 제시

• 야생동물 질병 및 불법 포획 · 채취 관리대책 마련

– 대전시 야생동물 질병현황 파악, 보호대상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채취 관리체계 구축 등 6개 세부과제 제시

• 유해 야생동물 관리방안 마련

–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5개 세부과제 제시

• 야생생물 보호 · 관리 기반 구축

– 대전광역시 보호야생동물 지정 · 관리,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확대 등 5개 세부과제 제시

• 대전 야생생물 교육 · 홍보 강화

– 대전 야생생물 생태교육 통합 운영, 야생생물 관련 홍보 · 활용 등 4개 세부과제 제시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향후 5년간('16~'20) 총 36.29억원 소요 예상**
- **대전 자체 예산과 일부 국비 지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및 대전세종연구원, 만인산 푸른 학습원 등의 예산을 활용하여 연구 수행**

대전시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연구책임자 이 은 재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지속적인 야생동물 질병 발생 및 관심 증대로 야생동물 질병의 통합적 접근 및 관리방안 마련

● 연구의 필요성

- 「제1차야생동물질병관리기본계획」 수립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별 시도계획 수립

Ⅱ. 연구의 내용

● 계획의 비전과 목표

- 비전으로 '야생동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태복지 도시 대전 구현'으로 설정
- '야생동물 질병 현황 파악', '야생동물 질병 대응체계 구축', '야생동물 질병 예방 관리' 등 3개의 목표 설정

● **추진 전략 및 세부과제(3개 추진전략, 6개 세부과제)**

• 기초자료 확보

– 대전시 야생동물 현황 파악, 야생동물 질병 특성 파악 등 2개의 세부과제 제시

• 거버넌스 구축

– 야생동물 질병 유관기관 협력 강화, 야생동물 질병 대응 시스템 구축 등 2개의 세부과제 제시

• 사전 예방홍보

– 야생동물 질병 관련 시민 홍보, 야생동물 질병 관련 정보 공유 등 2개의 세부과제 제시

• 유해 야생동물 관리방안 마련

–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5개 세부과제 제시

• 야생생물 보호 · 관리 기반 구축

– 대전광역시 보호야생동물 지정 · 관리,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확대 등 5개 세부과제 제시

• 대전 야생생물 교육 · 홍보 강화

– 대전 야생생물 생태교육 통합 운영, 야생생물 관련 홍보 · 활용 등 4개 세부과제 제시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향후 5년간('16~'20) 총 17.5억원 소요 예상**

●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및 대전세종연구원을 이용하여 연구 수행**

대전광역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연구책임자 이 재 근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계별로 수질환경 기준을 준수하는데 기여하여 국민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의 필요성

• 2025년을 목표로 광역지자체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임

Ⅱ. 연구의 내용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대전광역시 일반현황

– 가축분뇨 발생량, 처리현황 및 장래 추이 : 규모별, 축종별, 지역별로 제시

– 가축분뇨 자원화의 현황 및 향후 대책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재원확보 및 기타 사항

● 시나리오별 가축분뇨 처리의 경제성, 환경적 평가

	시나리오 1 (수거율 0%)	시나리오 2 (수거율 30%)	시나리오 3 (수거율 60%)
수거 · 운반 · 처리비용 (백만원/년)	0	140	281
설치비용–공공처리 (백만원/시설)	0	2,400	4,800
설치비용–공공자원화 (백만원/시설)	0	408	816
개별자원화 지원 (백만원/년)	62	43	25
1. 공공처리처리시설 (30년, 백만원)	–	7,890	13,980
2. 공공자원화처리시설 (30년, 백만원)	–	5,898	9,996
3. 개별자원화처리지원 (30년, 백만원)	1,860		
환경적 측면	만족	만족	만족
최적 시나리오	◎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가축분뇨 처리방법으로 ①개별 자원화처리, ②공공 자원화처리, ③자체 가축분뇨처리, ④공공 가축분뇨처리, ⑤광역 가축분뇨처리이 있는데, 대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모두 개별 자원화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됨
- 특히, 소규모 축산농가가 대부분인 대전광역시 특성을 고려하면 퇴비화(비료화) 처리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목표년도(2025년)에 맞추어 농지에 필요한 시비 요구량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자원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추후 대규모로 급격하게 가축분뇨량이 증가하게 되면 충청권의 광역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우선 이용하거나 및 공공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함

갑천유역의 배출부하량 적정화 방안

연구책임자 이 재 근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하여 해당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오염배출부하량을 할당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진행해야 함

● 연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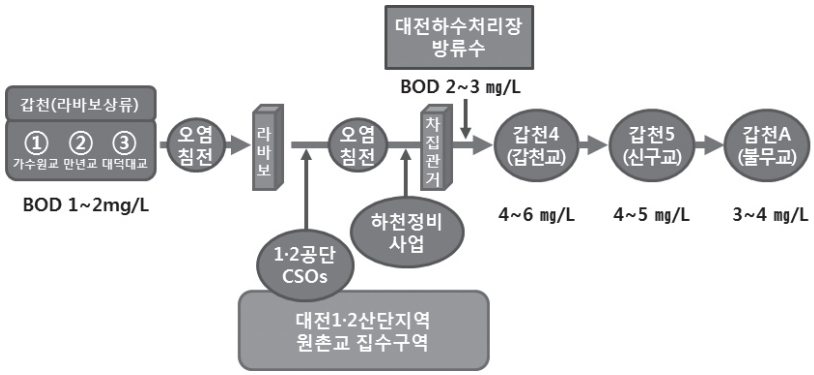
• 갑천 주요지점의 수질변화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못 밝힌 불명오염원이 있다는 것이 예측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수질오염총량제 3단계의 성공적인 추진과 불명오염원의 확인 및 처리를 위해서 본 연구가 필요

Ⅱ. 연구의 내용

● 갑천 하류의 수질 특성

• 본 연구의 모니터링 결과 대덕대교까지는 오염원 패턴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반면, 갑천에 유등천이 합류된 후 라바보~갑천교 구간에서 모니터링으로 조사된 유입되는

오염원에 비교하여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패턴을 보임



- **미처리배출의 확인**
  -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인근지역의 오접에 의한 미처리배출
  - 분류식지역에서의 오접에 의한 미처리배출
  - 대전산업단지 미처리배출
  - 대전산업단지 우수토실의 미처리 배출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대전시 하천의 수질관리 및 수질오염총량제의 배출부하량 적정화 연구로 다음의 결과 및 관리방안이 도출됨**
  - 화암펌프장의 관거 오접으로 엑스포아파트 옆 구거로 미처리 유출되는 오수의 배출을 확인하고 배출이 되지않도록 조치함
  - 대전산업단지 우수토실 월류웨어 증대로 비처리배출을 억제함
  - 갑천습지의 자정능력 확보 및 침전오염물의 관리가 필요함
  - 수질오염총량제 안전율의 조정으로 배출부하량 조정이 필요함
  - 하수관거 정비에 의한 추가삭감량 도출이 필요함

환경재난형 폭염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정 환 도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도시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발생하는 환경재해와 환경안전의 문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 최근에 대도시에서는 자연재해에서부터 인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에 따라 환경재해 및 환경안전에 대한 시스템적 재검검 혹은 정책적 방향 정립이 요구시 되고 있음

● 연구의 필요성

• 환경재난과 폭염에 관한 기초연구는 환경재해와 재난로부터 안전한 대전시 만들기에 대한 방법론적 제시에 있음

Ⅱ. 연구의 내용

● 대도시 환경재난형 폭염에 미치는 요인분석

• 폭염에 미치는 요인으로 기후 및 강수량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에서 분석을 통하여, 대도시

에서의 환경재난형 폭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

- **폭염의 미래변화 추이 분석**
  - 대도시별로 폭염에 대한 미래변화를 추이하고, 대전광역시의 추이를 분석함
    이러한 분석으로 대전시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종합적인 폭염상태를 진단함
- **폭염과 관련한 영향인자 분석**
  - 우리나라 대도시의 폭염일수, 온열질환자를 우선적으로 분석후, 이들의 상관을 살펴봄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대전형 폭염전문센터 신설**
  - 폭염이 매년 빈도 및 영향력이 달라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어려움이 있음
  - 수동적 폭염대응에서 현장중심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그리고 현재보다 진보하는 체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는 폭염전문센터 신설이 필요함
- **법률에 의한 피해보상 근거 필요**
  - 정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보험가입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여름철 폭염에 의한 피해, 즉 기온상승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의 사망 등에는 피해보상을 하고 있지 않음. 정부의 정책 및 민간보험 등을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대전시 환경재해 재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연구책임자 정 환 도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오늘날 기온상승으로 인하여, 해양온도의 상승으로 내륙지역의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이어져 발생되는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고 있음. 더불어 이러한 다량발생된 재해폐기물의 처리에 많은 예산 및 인적자원이 필요하게 됨. 이들 재해폐기물에 대한 수거 및 처리방법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함

● 연구의 필요성

• 본 연구는 도시의 성장이 급격하게 된 대전시에 있어 재해정도 및 재해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향을 제시함. 구체적으로는 대전시의 재해에 대한 종류 및 피해정도를 살펴보고, 대전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수거 및 처리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연구의 내용

● 환경재해의 특성 및 문제점

- 폭우리나라 환경재해 발생 및 복구현황을 고찰하고, 특성별 문제점을 제시함
- 또한 외국의 환경재해 특성을 살펴봄. 특히 미국의 태풍과 일본의 지진 등을 살펴보고, 독일,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의 순으로 특성변화를 고찰함

● **수해폐기물의 단계별 대응과 처리방향**

- 수해발생시 단계별 대응 및 조치사항을 고찰하고, 처리상황별로 관리실태 및 국고지원 절차를 살펴봄

● **수해폐기물 발생시 처리 기능별 역할**

- 수해폐기물이 발생되면 유관기관별로 그 임무 및 기능을 살펴봄.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의 유기적 관계성을 살펴봄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수해폐기물 관련 조례제정 및 매뉴얼 확보 필요**

- 수해폐기물 관련하여 수해폐기물 사전단계, 발생단계, 정치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대전시 정책방향 등을 제시함

● **수해폐기물 특성별 대응방향 설정**

- 수해폐기물의 발생 특성별 대처, 특히 대전시 3대하천 수변구역의 특성 및 폐기물 특성에 따라 수해폐기물 대응이 다름

반려동물 관련 환경여건 및 산업활성화 기초연구

연구책임자 정 환 도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반려동물 사육 가정 증가하며 유기동물이 발생 및 증가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또한 유기동물의 발생 및 증가로 인하여 시민 간 갈등 빈번 등 반려동물 관리가 사회문제로 이어져 이들에 대한 정책적 제시가 필요함

● 연구의 필요성

• 본 연구는, 시민들이 반려동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환경여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 제공에 연구의 목적을 가짐. 특히 도심에서 인간과 함께 하는 반려동물의 환경여건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 더불어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연구의 내용

● 대전시 반려동물 현황조사

-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현황 조사(개, 고양이 등 사육현황, 개 동물등록 현황, 관련업소 현황 등)를 수행

●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반려동물 정책조사**

-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반려동물 환경여건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시도한다. 이때 가능한 외국의 자료 등을 조사분석하여 대전형 환경여건에 대한 안을 제시

● **관련산업 활성화의 아이디어 제시**

- 관련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는 선진국의 반려동물 관련 활성화가 매우 높은 유럽 및 일본 등의 정책자료를 조사분석하여 과제를 수행하함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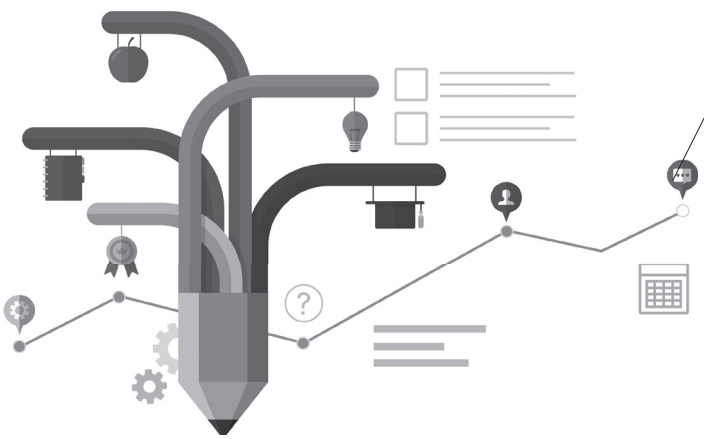
● **반려동물 산업 활성활를 위한 방향제시**

-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반려동물 산업 활성활를 위한 방향을 제시함
- 시민 및 시장기능에 의한 방향, 특히 반려동물 온라인, 오프라인 페스티벌, 사진대회 등을 제시하고, 반려동물 동호인 활성화를 위해 인스타 등의 페이지시설 등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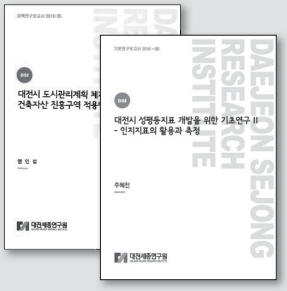
● **반려동물 사료 및 용품업/ 서비스에 대한 방향 제시**

- 특히 서비스업을 의료 및 건강서비스, 보험, 장례업, 새로운 산업트랜드 개발방향 등을 중심으로 제시함

Ⅳ. 발간자료



01 연구보고서, 대전세종포럼, 월간대전경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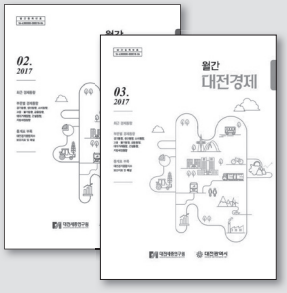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21세기 미래대전을 준비하고 선도하는 대전의 싱크탱크로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과 종합적 문제해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등 출연기관이 현안사항 등에 대해 연구를 요청하거나 연구원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정책개발 또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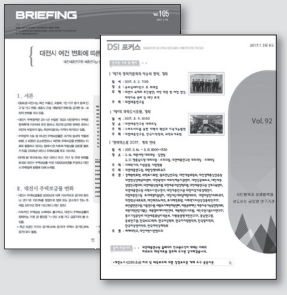
대전세종포럼

「대전세종포럼」은 2001년부터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행한 계간지로 지역의 주요 현안들과 대전시정과 관련된 연구논문을 게재하여 실어 주로 정책입안자, 학계 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간대전경제

「월간대전경제」는 2003년부터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월간지로서 대전지역 경제동향의 과학적 분석 및 평가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지역 유관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소식지(BRIEFING), DSI FOCUS

「BRIEFING」은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월간 브리핑으로 연구보고서 요약, 월간대전경제의 주요지표 등을 수록하며, 「DSI FOCUS」는 매월 2회 메일로 발송되며 시민과의 정책 소통 및 공유를 위해 일반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02 홈페이지 소개

우수한 연구 Database를 구축하고 있는 대전세종연구원은 글로벌시대와 최첨단 IT기술 사회에 걸맞는 웹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단장된 홈페이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와 최첨단 IT기술 사회에 걸맞는 웹서비스 제공

1. 비전 및 사업목표를 기본으로 콘텐츠를 정보 성격별로 그룹화하여 접근성, 편리성을 고려한 메뉴 설계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2. 대전세종연구원이 시정 연구의 산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정보DB를 구현하였습니다.
3.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쌍방향 의사소통 창구(시민의 소리, 제안합니다, 정책토론)를 구축하여 다양한 여론 수렴 등 동적 웹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4.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대전세종포럼, 월간대전경제, 연구원소식지 등의 e-book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연구원 발간물의 쉽고 빠른 검색을 위해 검색엔진을 도입하여 메인 화면에서 바로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정보검색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6. 매월 홈페이지 가입자들에게 연구원 행사소식 및 새로 나온 연구보고서, 간행물 등의 소식을 웹진으로 발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서소개 및 연구원 정보 제공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원 조직 구성 및 연구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연구원의 전문분야, 수행과제 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열린연구, 개방형 연구기관으로서 시민과의 정책공유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제공

2011년 3월 새롭게 출발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 실현과 추진을 지원하며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2015년 6월 24일 출발한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민과 관의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정책연구자료, 각종 통계 등 다양한 지식정보를 DB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등 발간자료 제공

대전세종연구원은 지식생산의 허브, 개방형 연구기관으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되는 기본, 정책 연구보고서, 대전세종포럼, 월간대전경제 등 각종 발간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행사자료 제공

연구원에서 개최한 각종 행사소식 및 세미나, 토론회, 포럼, 시민설명회 등의 행사 자료집을 함께 제공하여 시민과의 정책 공유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 대전세종연구원 연차보고서

발행일 2017년 5월 17일

발행인 유재일 / 대전세종연구원장
편집인 김기희 / 기획조정실장
김길순 / 부장
맹정열 / 주임
윤지은 / 사무원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주 소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 화 042-530-3500
팩 스 042-530-3508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www.dsi.re.kr